



## 손님은 연금개혁, 미래세대엔 폭탄

저출산 심화로 2057년 국민연금 고갈 40년 뒤 200만원 벌면 54만원 내야 개혁안은 여론 반발에 2년째 헛바퀴

40년 후, 월소득 200만 원인 자영업자가 매월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53만6000원이다. ▶관련기사 4면  
적립금 소진 예상 시점인 2057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완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면하는 현실이다.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고용주가 내지만 이 역시 가입자에게 이익은 아니다.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줄어들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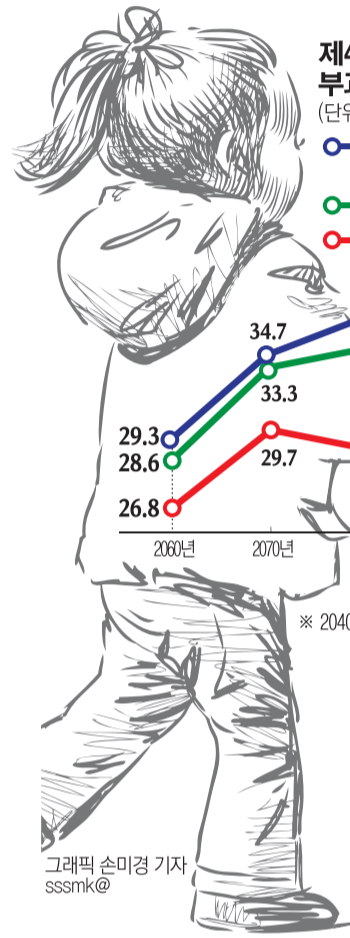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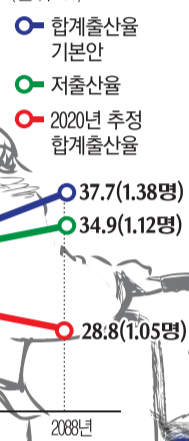
보건복지부가 제4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지 2년 넘게 지났다. 하지만 여론 반발의 의식해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할지,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논의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개혁이 지연될수록 늘어나는

건 미래 세대의 부담뿐이다. 적립금 소진 예상 시점 이후인 2060년 부과식 비용률은 26.8%다. 비용률은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감당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그나마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2070년에는 29.7%, 저출산 심화로 가입자가 준다면 그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 소득의 3분의 1 가까이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1985조 3000억 원)의 53%에 달한다. 총부채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총당부채는 보험료 수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회계상 부채로, 일반적인 '나랏빚'과 다르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뒤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회계상 부채의 상당분은 실제 '나랏빚'이 된다.

최기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지난달 한국연구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구조적 개혁은 상당한 기간의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며, 제도 전환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 소득재분배 정상화 등 최소한 점진적 개혁의 조속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제4차 국민연금 부과방식비용률 (단위: %)



그래픽 손미경 기자 sssmk@



"日 오염수 방류 규탄" 해상시위

19일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어민들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며 해상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어민들은 해상 퍼레이드에 여수지역 어선 150여 척을 동원했다. 연합뉴스

## 與 '종부세 완화론' 띄우자 洪 "살펴보고 있다"

홍남기 총리대행, 대정부질문서 밝혀 "공시지가 부담 경감 최대한 고려 중"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청 고위 협의회에서 2·4 대책을 중심으로 한 주

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 기준 9억 원 →12억 원 △공시가격 상승률 조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특례세율 적용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총리대행은 "종부세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억~14억 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종부세 기준) 9억 원이 11년~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홍 총리대행은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올라 부담이 늘어났다"면서도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8면에 계속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현대車로 갈아타는 LG맨 대기업 R&D 인력 대이동

SK하이닉스→삼성전자 2030, 연봉·복지따라 이직

세계 주요 기업이 새로운 미래 사업 추진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핵심 R&D 인력의 대이동이 본격화했다.

성과급에 불만을 느낀 SK하이닉스 인재들은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경력직 채용에 맞춰 이직을 준비 중이다.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예고한 LG전자의 일부 연구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이들은 커넥티드카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으로의 이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 대부분이 올해 들어 공격적인 R&D 인재 발굴에 나섰다. 채용 직후 곧바로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인재가 주요 '타깃'이다. 전자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업종을 막론하고 △사업 재편 △글로벌 경쟁 심화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 등이 절실한 상태이 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최근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경력직 채용에 나서면서 해당 업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 디바이스솔루션

(DS) 부문에서 최대 수백 명에 이르는 경력직 채용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재 채용에 나서면서 '연구인력 대이동'에 불을 지폈다. 가전(CE)과 모바일(IM) 부문은 물론,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와 생활가전, 무선사업, 네트워킹에서 글로벌기술센터까지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경력직 인재 채용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경력직 채용에 나서며 만큼, 주요 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최근 '성과급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인력 이탈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사측이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에 나서 R&D 인재를 붙잡아 둘 당근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뜨겁지 않다.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경력직 채용이 SK하이닉스는 물론 LG전자 인재에게 탈출구를 열어줬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한때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경력직 모집에 1500명이 지원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롯데케미칼과SK이노베이션이 공격적으로 R&D 경력 인재를 찾고 있다.

▶12면에 계속 김준형 기자 junior@

## 제조업 일자리 7.2만개 해외유출

환경연 "기업규제, 고용 발목"

지난해 국내 제조업 일자리 7만 2000개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미·중 무역 패권 전쟁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 외국인 직접투자(FDI)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해 19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7만 개 넘는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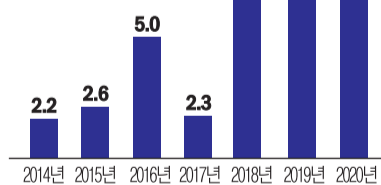
한경연은 직접투자 순수출액에 취업유발계수(해당 산업에서 최종 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때 관련 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곱해 직간접 일자리 유발 인원을 추정했다.

한경연은 이를 토대로 "해외로 나간 제조업 일자리 7만2000개만 잡았어도 지난해 실업률이 4.0%에서 3.7%로 0.3%포인트 개선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직접투자 순수출액이 높은 업종 중에서도 취업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장비, 자동차, 식품 등의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진다"

제조업 직간접 일자리 해외 유출 추이

(단위: 만 명) ※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차이를 통해 일자리 손실효과 추정



며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프레저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2020년 기준)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도 낮아 노동규제가 매우 엄격한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2019년 기준)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이었다.

한편 세계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때 거세진 미·중 무역전쟁으로 현지 생산기지 필요성이 커진 것도 해외투자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 ‘보복소비·원유 재고 소진’ 글로벌 경제 혼풍 분다

### 팬데믹 후 추가 저축액 6032조... 3분의 1만 써도 GDP 2% 성장 석유 재고 5분의 1만 남아... 수요 늘면 원유 가격 74달러 갈 수도

글로벌 경제에 혼풍이 불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끝나면 전 세계적으로 보복소비 물결이 강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유가가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등 궤멸적 피해를 봤던 국제 원유시장도 완전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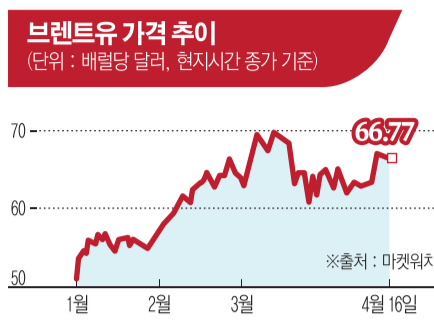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분석을 인용해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추가 저축액이 5조4000억 달러(약 6032조 원)에 달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정책이 완화되면 소비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2019년 소비지출과 비교해 추가 저축액을 산정했다. 그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한다.

또 콘퍼런스보드(Conferance Board)가 집계한 올해 1분기 글로벌 소비자신뢰지수는 108로, 2005년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선진국들의 가계 저축률이 금세기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일련의 결과는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각국의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 현금을 쌓아 둔 가계가 다시 지갑을 활짝 열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 저축액은 특히 미국과 유럽에 집중됐다. 이들 지역이 봉쇄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부양책을 통해 자금을 공격적으로 풀 영향이다. 미국에서만 2조 달러 넘는 자금이 추가 저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은행 자문업체 에비코어(EV)의 크리스티나 구하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수치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조9000억 달러 규모



의 슈퍼 부양책을 시작하기 전 규모라고 전했다.

무디스는 “소비자가 추가 저축액의 3분의 1만 지출해도 올해와 내년 세계 GDP를 2% 넘게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도한 저축과 억눌린 수요의 결합은 각국이 집단면역을 통해 경제를 개방하게 되면서 전 세계 소비지출 급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저축 상당 부분이 부유층에 쏠린 만큼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옥스퍼드가



코노믹스의 애덤 슬레이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추가 저축이 대부분 부유한 가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저축이 소득 증가가 아닌 부의 축적으로 이어진다면 소비지출은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어난 석유 재고 과잉 사태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수요 급감에 따라 선진국 원유 저장 탱크에 축적된 잉여재고분이 올해 2월 기준 5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선진국 원유 재고는 2015~2019년 평균을 5700만 배럴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7월의 2억4900만 배럴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2월 이후에도 해상 비축 급감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저장시설에서의 재고 감소 등으로 남은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씨티그룹의 에드 모스 상품조사부팀 책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의 상업용 원유 재고가 벌써 5년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다”며 “잉여분은 영구적 원유 비축을 하고 있는 중국에 완전히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유 수요가 더욱 회복돼 세계 재고가 올 하반기 하루 220만 배럴의 속도로 감소하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4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브렌트유는 올해 이미 약 29% 올라 현재 배럴당 67달러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변호선 기자 hsbun@  
고대영 기자 kodae0@

## 제네시스 G80 전기차 첫선 “태양광 충전”

### ‘2021 상하이모터쇼’ 참가 1회 충전으로 427km 주행 ‘아이오닉5’·‘EV6’도 선보

제네시스가 ‘2021 상하이 국제모터쇼’에서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G80 전동화 모델(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대 자동차와 기아도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를 공개하며 현지 전기차 시장 공략을 예고했다.

제네시스는 19일(현지시간) 상하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1 상하이 국제모터쇼’에서 브랜드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본격적인 전동화의 시작을 알렸다.

제네시스는 G80 전동화 모델에 87.2

kWh 배터리를 썼었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427km이며, 350kW급 초고속 충전 시 22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G80 전동화 모델은 AWD(사륜구동) 단일 모델로 운영된다. 합산 최대 출력 272kW(약 370마력), 합산 최대 토크 700Nm의 동력성을 갖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9초 만에 도달한다.

G80 전동화 모델은 다양한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400V/800V 멀티급속 충전시스템이 적용됐다.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도 갖췄다.

태양광을 이용해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솔라루프’도 적용했다. G80 전동화 모델은 솔라루프를 통해 하루 평균 730

Wh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약 1150km의 추가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G80 전동화 모델은 기존 G80의 우아하고 역동적인 외관과 여백의 미를 강조한 여유롭고 균형 잡힌 실내를 계승하면서 고급 EV 세단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더했다.

전면부 그림은 공기역학적 효율을 고려한 전기차 전용 패턴으로 제네시스 고유의 전기차 이미지를 구현했다. 그릴 상단에 있는 충전구는 닫았을 때 충전구의 경계가 드러나지 않아 그릴 일부처럼 보인다.

현대차는 19일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며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마련한 4대 전략 △전동화 확대 △



수소기술 강화 △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제시 △현지 기술력 강화를 재강조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전용 전기차 모델을 중국에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과 수소 전기차 등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해 2030년까지 총 13개의 전동화 제품군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아도 전략 모델 EV6를 처음 중국에서 공개했다. 기아는 EV6를 시작으로 현지에서 내년부터 전기를 매년 출시해 2030년까지 총 8개의 전동화 제품군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아는 상반기 출시 예정인 중국 전략형 준중형 SUV ‘즈파오’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도 함께 선보였다.

유창욱 기자 woogi@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 세계로 향하는 K뉴딜 KSURE

###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을 함께 선도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그린·디지털 등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稅부담 줄어 거래 활성화” vs “집값 자극 부작용 우려”

## 전문가 ‘세제 완화’ 엇갈린 평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갈지(之)자’ 행보 끝에 세제 완화로 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 부담 경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되레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국민에게 부담 주는 세금 경감 시급 - 주택 공급, 민간·공공 투 트랙으로”  
“양도세 감면 편 거래 활성화 기대 - 고가주택 가격 기준 높여야”  
“세금 부담 줄면 집값 자극 우려 - 대출처럼 세금도 실수요자 위주로 경감해야”  
“시세 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불공정 - 고가주택은 감세 대상 아냐, 현실화 계속돼야”

**당정, 재산세·보유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  
**“서민 부담 줄 것” 긍정적 평가...“집값 먼저 잡아야” 비판도**

후보자도 이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공공 주도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간 고집해 온 공공 주도 개발에서 한발 물러선 발언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드러났다”며 “실책을 인지하고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 전환 과제를 묻자 서 교수는 “국민들

에게 부담을 지우는 세금 정책 개편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되 민간이 못하는 부분을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침체됐던 시장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움직임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과 2주택자 양도세 증가와

화를 높이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여권에 더 과감한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정권 초라면 모를까 지금은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 12억 원도 고가주택으로 보기 힘들다. 고가주택 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정책 전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경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은 시장에서 풀어줬으면 하는 규제들”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세금이 줄면 거래량과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무엇을 위해 세금을 경감하려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가 “최근 정부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처럼 세금 경감도 실수요자 위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고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여권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을 우려 섞인 눈으로 본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시가격이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나는 건 불공정의 문제”라며 “지금도 비슷한 시세인데 어디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다른 곳을 내리는 등 현실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보유세 감세 문제에서도 조세 부담 경감을 지지하는 쪽과 견해를 달리했다. 그는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해야지,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보호해야 할 감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는 건데 세율을 낮추려고만 하고 집값은 건드리지 않는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투기 억제책을 주문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집값 뛰자 깜짝 놀란 듯 ‘규제 강화’로 돌아서나

재건축단지 많은 압구정·여의도 ‘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 교육지책

**토지거래허가제 현황** ※ 출처: 서울시

개념	토지 투기 방지와 합리적 자가 형성을 위해 일정 기간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
주요 지역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 등
지정 기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5월 말~6월 22일 만료

서울시가 집값 급등 우려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 강화 쪽으로 선화할 태세다. 시는 주요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으로 들쭉날쭉하고 있다.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7%로 전주(0.05%)보다 0.02% 포인트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월 첫째 주 0.1% 오른 이후 10주 연속 상승폭을 줄이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반등세로 돌아섰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와 영등포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19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 직후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 걱정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가 지정 대상 예상 지역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이 유력하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실제 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지수 상승률은 0.49%로 집계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인 강남구와 송파구는 0.56%와 0.64%로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토지 거래 계약 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거용지 내 주택을 사들일 경우 2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도 없다.

반면 규제지역 내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등 거래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시 가격 급락은 없겠지만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순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남권에선 고가 주택 밀집지역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이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와 별도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통해 앞으로 5년간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공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건축본부 조직을 확대해 오 시장 공약인 ‘스피드 주택 공급’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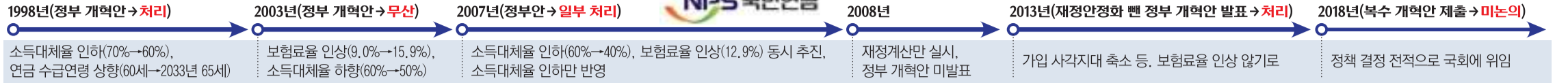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추진은 최근 서울 내 집값 급등 우려에 따른 ‘교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 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간 정비사업 완화 정책을 펴기도 전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 강화안을 먼저 꺼낸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원칙은 곧게  
믿음은 곧게

금융이 지켜야 할 원칙  
고객과 지켜야 할 약속  
한국투자증권이 지켜줍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국민연금제도 개혁 추진 경과



# “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 연금개혁 손놓은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이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2018년 12월 이후 2년 4개월째다.

종합운영계획 제출 직후에는 야권의 거부로 논의가 지연됐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복수안(4개안)'을 내놨단 이유에서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부안을 3개안으로 축약해 발표했지만, 이 역시 진전은 없었다. 지난해 초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 뒤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이슈가 매몰됐다. 이런 상황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미룰 좋은 핑계가 됐다.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는 보험료를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다.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입법으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잇달아 실시된다. 이후 새 정부 구성과 국회 후반기 원구성 등을 거치

2003년 인상안에 국민적 저항 2007년 3차 논의후 사실상 방치 코로나 등 악재에 처리 뒷전으로

면 다시 '총선 시즌'에 돌입하게 된다. 연금 개혁에 있어선 악재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선거 악재를 염려해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개혁 논의는 진전이 어렵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떠넘기기'의 반복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1차 개혁을 추진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수급연령 조정 폭이 작고, 보험료를 인상을 수반하지 않아 1차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후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 따라 정부는 2차 개혁을 추진했다. 보험료를 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더플러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0%에서 15.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하는 게 골자였다. 급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했기에 국민적 저항이 컸다. 특히 사실관계가 왜곡된 '국민연금 8대 비밀'이란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국민연금 안티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개혁은 중단됐다.

첫 개혁다운 계획은 2007년 3차 개혁 시

도였다.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소득대체율 인하(60%→40%)와 보험료율 인상(12.9%)을 동시 추진했다.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 보험료율 인상은 무산됐지만, 당시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미뤄지게 됐다.

이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07년 개혁

을 이유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제3차 재정계산과 함께 '재정안정화 방안뎀'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과 함께 개혁안을 내놨지만, 재정안정화 방안을 4개나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국회에 떠넘긴 것이다. 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만 보자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크게 다를 바 없다.

일부에선 재정계산 기간을 기존 7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실점에서 적립기금은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계산 기간을 30년으로 단축하면 2027년 전에는 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추계 기간이 일본은 100년, 캐나다는 150년이고, 유럽의 일부 국가는 300년까지 된다"며 "추계 기간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세종=곽도흔 기자@sogood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 국민연금과 통합 필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 년 전 적립금이 모두 소진돼 적자 상태인 공무원·군인연금의 경우 정부가 매년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기금을 보전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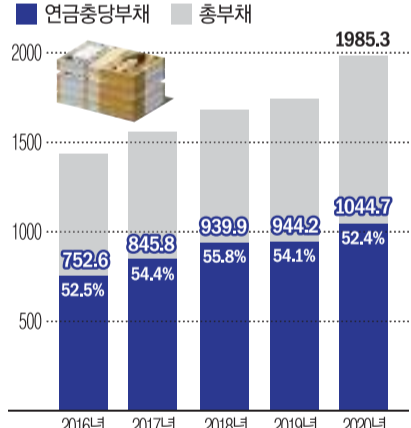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는 각각 1조7638억 원, 1조5779억 원에 달한다. 해당 적자분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줬다.

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은 2030년 6조8000억 원, 2040년 12조2000억 원으로, 군인연금

공무원·군인, 정부가 적자 보전 사학도 2048년 적립금 소진 전망 박근혜 정부 공무원연금만 손질 나머지도 개혁 후 통합 관리해야

은 각각 2조5000억 원, 3조4000억 원으로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적자분 해소를 위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연금의 재정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사학연금의 재정 상태가 현재 양호한 상태지만 갈수록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2048년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은 정부가 기금 적자분을 보전해 주지는 않지만, 연금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정부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꿔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 연금충당부채 추이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적자가 늘어나는 공무원·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었다. 이 중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손질됐지만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개혁이 이뤄진 공무원연금처럼 군인연금 등도 동일한 수준으로 손질한 뒤 국민연금과 통합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공무원 보험료율이 14%(본인 부담 7%)에서 18%(본인 부담 9%)로 인상됐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됐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70년간 정부 재정부담 절감액이 33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건호 내기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소득대체율(50% 이상) 및 운용 방식이 비슷한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손질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인 뒤 국민연금과 공무

원·군인연금, 사학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통합은 공무원 등에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대체율을 적용하고 일반 노동자처럼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개편을 의미한다"며 "가령 신규 공무원에게만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재직자는 공무원연금 적용을 유지한다면 점차적으로 재직자에게 주는 공무원연금이 줄고 결국엔 소멸돼 국민연금으로 일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통합 시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분을 국민연금으로 메꿔줘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들 연금과 국민연금의 적립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므로 재정은 구분해서 운영하면 되고, 통합에 따른 적자 증가분은 신규 공무원 등이 적립해 갈 퇴직연금을 전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퇴직연금 의무가입 하도록 정부 지원 필요”

### 도입 15년 지났지만 사업장 가입률 27.5% 그쳐 사업주에 세제혜택·보조금 지원 가입 강제 유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퇴직연금을 보완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이 쉽지 않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은 힘들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 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

구' 자료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필요 노후 소득은 월 130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10만 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2019년 말까지 가입 이력 자료로 추정할 결과 노인 단독 가구 필요 노후 소득인 130만 원을 공적연금으로 수급받는 사람은 은퇴예정 세대 중 8.41%(남성 15.95%, 여성 0.79%)에 불과했다.

공적연금 이외 소득 충당 방안으로 전문자들은 퇴직연금 활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

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은 의무가입이 아니다.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2019년 기준 사업장 도입률은 27.5%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입률은 24.3%로 더욱 낮아진다.

지난달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퇴직기금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적퇴직연금운영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에 공적인 성격에 더해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입을 모은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장수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재정 문제로 확대에 한계를 가진 만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선진국은 퇴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강제형, 혹은 준 강제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을 강제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제할수록 세제 혜택, 보조금을 지급하고 종신연금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수수료와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고려하는 한편,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 준공적연금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희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도 "퇴직연금에 대한 지원은 잦은 이직으로 소액적립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은퇴연령까지 퇴직연금이 중도인출되지 않도록 중도인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긴급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 등 대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연금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퇴직연금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급을 하도록 일정 부분 강제한다면 추가적인 부담 없이 노후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퇴직연금이 준공적연금화돼 중간계층 이상 은퇴자의 노후소득원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면, 국가는 기초보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고용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올해 새내기株, 공모가 산정부터 ‘쩐의 전쟁’

올해 새내기주 공모가와 최근 주가  
(단위: 원)

회사명	공모가	시초가	16일 주가
엔시스	19,000	38,000	26,300
자이언트스텝	11,000	22,000	49,300
제노코	36,000	65,000	53,700
라이프시맨틱스	12,500	25,000	13,550
SK바이오사이언스	65,000	130,000	132,000
바이오다인	30,000	40,000	76,100
네오이뮤텍	7,500	15,000	12,900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12,400	12,100	18,850
씨이버원	9,500	18,000	17,400
나노씨엠에스	20,000	33,000	17,900
뷰노	21,000	32,900	23,750
유일에너지테크	16,000	32,000	22,400
씨이랩	35,000	46,600	43,600
오로스테크놀로지	21,000	42,000	43,700
피엔에이치테크	18,000	20,500	24,800
아이퀘스트	11,000	22,000	15,250
피비파마	32,000	28,800	32,300
레인보우로보틱스	10,000	20,000	26,600
와이더플래닛	16,000	24,900	25,300
솔루엠	17,000	34,000	26,800
핑거	16,000	32,000	21,900
모비릭스	14,000	28,000	24,450
씨엔투스성진	32,000	31,700	22,650
선진뷰티사이언스	11,500	23,000	21,200
엔비티	19,000	38,000	25,600

25개 공모가 모두 희망밴드 상단에 LG엔솔·카뱅·크래프톤 IPO 앞뒤 장외시장까지 후끈 ‘거품’ 우려도 “높은 공모가, 고수익 보장 아냐”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수준. SK바이오사이언스·카카오뱅크 등 대어급 기업공개(IPO)가 본격화하면서 공모주 청약 시장의 치열한 경쟁은 이렇게 비견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반 공모주 청약에 63조6000억 원을 끌어 모으면서 사상 최대 증거금 기록을 세웠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등 상장을 앞둔 기업들의 공모가는 희망범위 상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균등배정 방식 등이 도입됐지만, 공모주 청약 경쟁도 갈수록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와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 크래프톤 등의 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장외 시장에 눈을 돌리는 이유다. 한편에선 공모가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IPO시장 뜨거운 ‘청약 열기’ = 19일 한 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는 본격적인 IPO 일정에 돌입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기준 매출 1조 6704억 원, 영업이익 7738억 원, 당기순이익 556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당기순이익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넥슨(1조1907억 원)과 엔씨소프트(8247억 원)에 이어 기업공개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9일 국내외 증권사 10여 곳에 상장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이달 중 주관사단을 확정하고 코스피 시장 진입 준비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는 5월 중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지난달 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 등 예상 기업 가치가 최소 수조원대에서 최대 수십조원대인 기업들이 IPO를 준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열기를 뛰어넘을 것이라 관측이 많다. 실제 올해 들어 25개 기

업(스팩 상장, 재상장 제외)이 증시에 입성했다. 증시에 유입된 공모자금은 2조 8608억 원(스팩 포함)에 달한다. 3월로 한정하면, 1조8148억 원 규모의 공모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2010년 3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기관투자자들도 신규 상장기업에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IPO 대어’로 꼽혔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127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25개 기업 모두 희망밴드 상단 수준에서 공모가를 확정했다. 이 중 16개 기업은 희망밴드 상단을 뛰어넘는 가격으로 증시에 입성했다.

동학개미들의 투자열기도 뜨겁다. 25개 기업 중 22개 기업이 상장 당일,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기록했다. 엔비티, 선진뷰티사이언스, 모비릭스, 핑거, 솔루엠, 레인보우로보틱스, 아이퀘스트, 오로스테크놀로지, 유일에너지테크, 네오이뮤텍, SK바이오사이언스, 라이프시맨틱스, 자이언트스텝, 엔시스 등 14개 기업의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2배에서 형성돼 거래가 시작됐다.

‘파상’으로 직행한 새내기주도 다수였

다. 선진뷰티사이언스, 모비릭스, 레인보우로보틱스, 오로스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자이언트스텝 등 6개 기업은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에서 형성된 후 곧바로 상한가를 찍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IPO 시장의 예상 공모금액은 1500억~1700억 원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금액 기준으로는 과거 2017년 이후 4년 만에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상장이 곧 대박은 아니다=공모가 거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관심이 높아 공모가가 높게 결정됐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공모주에 투자할 때에는 공모주의 미래 사업계획이나 투자 위험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 씨엔투스성진,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등 3개 기업은 상장 당일, 공모가를 밑도는 수준에서 거래됐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피비파마로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인아 기자 ljh@

## 빅4 운용사에 헤지펀드까지 ‘액티브ETF’ 러시

‘돈나무’ 아크 ETF 성공에 자극 규제 완화로 내달 8개 상장 예정 신한·KB·신영자산운용 등 검토

‘돈 나무’. 지난해부터 글로벌 금융투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떠오른 캐시우드(Cathie Wood) 아크(ARK)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국내 투자자들이 불인 애칭이다. 캐시우드 대표가 운용하는 5개 액티브 ETF는 지난해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올해 들어서도 인기는 여전하다. 아크 스페이스 ETF는 해외 투자 순매수 8위(2억 7188만 달러)에 이름을 올렸다.

우드의 대표 ETF인 ‘ARK 이노베이션(ARKK)’처럼 특정한 지수를 추종하지 않고,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가 최근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옆집을 하는 주식시장과 공모펀드 시장 위축 속 몸집을 키우는 ETF 시장을 잡기 위해 삼성·미래에셋·KB·한국투자 등 ‘빅4’ 운용사는 물론 타임폴리오자산운용까지 경쟁에 나서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9월 액티브 ETF가 도입됐지만 여러 제도적 제한 때문에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4개 자산

### 주식형 ETF 종류

**액티브 ETF** 시장 상황에 따라 편입 종목은 빠르게 선택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다. 반면 패시브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게 단점이다

**패시브 ETF** 코스피 200등 주요 지수의 등락에 따라 기계적으로 편입된 종목을 사고파는 ETF. 시장 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액티브 투자에 비해 비용이 덜 든다.

### 액티브 ETF 출시 예정 운용사

삼성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미래에셋자산운용	이동수단, 해외 BBIG(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한국투자신탁운용	친환경자동차, ESG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코스피 지수형, 국내 BBIG

운용사가 각각 2개 액티브 ETF 상장을 위한 거래소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이 없다면 이번 주 심사 결과가 나오고, 다음달 중순 총 8개 액티브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최근 액티브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한 것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액티브 ETF 관련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70%는 지수를 추종하지만 30%는 운용사에 재량을 줬다. 아크(ARK) ETF의 성공도 국내 액티브 ETF 출시 니즈(needs)를 가속화했다. ARK인베스트먼트의 액티브 ETF는 우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난해에만 273억 달러(약 33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모았다. 실제 미국은 전체 ETF의 20%가 액티브 ETF일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상품 수는 530여 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잇따라 액티브 ETF 출시를 서두르고 있고, 전담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에 별도의 액티브 ETF전담 운용팀을 꾸리고,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를 테마로 한 국내 주식형 ETF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투운용은 아예 별도의 액티브 ETF 브랜드를 론칭한다. 패시브 ETF의 브랜드는 KINDEX, 액티브 ETF는 ‘내비게이터’(가칭)를 사용할 방침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이름을 알린 타임폴리오자산운용까지 액티브 ETF 경쟁에 가세했다. 지난해 말 신설한 ETF본부엔 삼성자산운용 출신인 문경석 전무를 포함해 매니저 4명이 포진돼 있다. 이 외에도 신한·KB·신영·우리·미다스자산운용 등이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액티브 ETF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액티브 ETF 추가 개선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업계에서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 시간을 두고,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eom@

## GM 손잡은 LG화학, 주가 더 뛰나

### 배터리 증설 유상증자 추진

글로벌 자동차기업 GM과 손을 잡은 LG화학의 주가가 한 단계 더 뛰어오를지 관심이 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G화학의 배터리사업개발사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자동차제조기업 GM과 협력해 설립한 얼티엄셀즈(Ultium Cells LLC)의 신공장 증설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총 2조1284억 원 규모로 GM과 절반씩 참여하기로 했다. 2021년 계약 체결 이후 시점부터 2023년까지 분할해 납입될 예정이다. GM도 같은 규모로 얼티엄 셀즈에 출자하고, 얼티엄셀즈는 약 6000억 원을 별도로 차입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2합작공장 설립에 들어가는 전체 투자금은 약 2조7000억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시장에선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생산시설 확대가 주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완성차들의 배터리 중장기 로드맵 발표로 배터리 셀 판매단가 인하 압박, 고객사들의 내재화 전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지만, 2025년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45.8%에 이를 것이라 예상된다”며 “특히 LG화학의 미국 추가 증설, 원통형 전지 용량 확대를 통한 배터리 폼팩터 다변화를 진행 중이라 우려는 제한적이라 판단해 펀더멘털과 동행하는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분사를 통해 전지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특히 향후 1~2년 내 전체 사업 중 전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 중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석유화학과 전지 매출 비중 변화를 보면 △2018년 60.4%, 24.1% △2019년 54.8%, 30.5% △2020년 45.6%, 41.1% 등으로 2020년 기준 석유화학·전지 매출이 4.5%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전지사업의 성장세로 비추어 보면 올해나 내년에도 매출 비중 1위를 차지하게 된다.

한승재 DB금융투자 연구원은 “5월 이후 원유 증산과 함께 중동의 화학제품 공급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1분기를 최고점으로 점차 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며 “전지는 추가 충당금이 없다면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3분기 성수기까지 분기 대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NH證, KIS채권평가와 ‘ESG 채권 지수’ 개발

NH투자증권은 19일 여의도 신사옥(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KIS채권평가와 ‘전략적 지수사업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NH투자증권 정용석 부사장, KIS채권평가 윤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NH투자증권은 국내외 다양한 채권과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지수 개발을 진행한다. 특히 금융 시장의 최대 화두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채권 지수의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NH투자증권의 지수 개발·산출의 노하우와 KIS채권평가의 채권 평가 기술이 합쳐진 ‘KIS-iSelect ESG 채권 지수(가칭)’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외 채권 및 채권 ETF와 같이 다양한 상품을 충족하는 테마형 채권 지수도 개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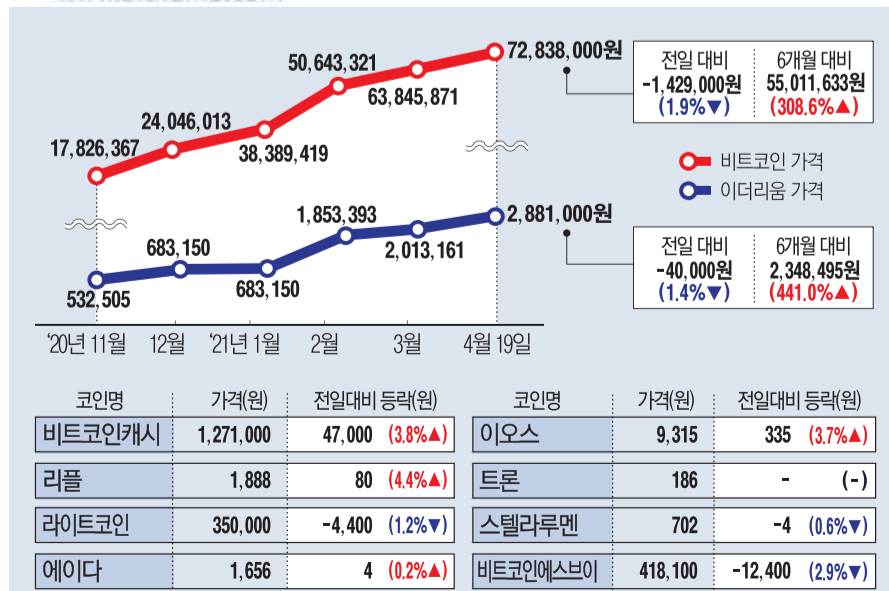
정용석 NH투자증권 부사장은 “업계 최고의 신뢰와 명성을 자랑하는 금융상품 평가 전문회사인 KIS채권평가와 신규 지수 개발 파트너가 돼 매우 기쁘다”며 “NH투



지수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한 정용석(오른쪽) NH투자증권 부사장과 윤기 KIS채권평가 대표.

자증권의 지수 개발 노하우와 함께 ESG 뿐만 아니라 한국 패시브 시장의 패러다임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eom@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1년 4월 19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가상화폐 불법행위 꼼짝마” 범정부 특별단속 나섰다

### 자금세탁 의심거래·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 6월까지 점검 “다단계·유사수신·투자 사기 가능성 커져 각별히 유의를”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

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회사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FIU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으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

에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 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과 맺는 약관 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등 불공정 조항 존재 여부를 조사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 송금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로 가장한 해외 가상화폐 투자 목적 송금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응을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와 협조해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사

를 벌여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정부는 또 국민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변이發 ‘4차 유행 공포’ 현실로

### 영국변이 등 누적 확진 1000명 육박 AZ 접종 40대 여성 뇌척수염 진단

변이바이러스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역학적 관련 사례까지 합하면 변이주 확진자는 누적 1000명에 육박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32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512명이다. 휴일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에 따른 진단검사 감소로 확진자 발생은 다소 줄었으나, 휴일효과가 종료되는 20일 이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1주간(11~17일) 감염경로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병원·요양시설 집단감염은 예방접종 효과로 큰 폭으로 줄었으나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비율이 3주 전 35.8%에서 47.4%로 올랐다.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도 23.7%에서 28.8%로 상승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가파르다. 12일 이후 1주간 국내발생 35건, 해외 유입 35건 등 70건의 주요 3종(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주가 추가 확

인(누적 449건)됐다. 변이주 확진자와 같은 경로에서 감염된 확진자(역학적 관련 사례)를 합하면 총 변이주 확진자(추정)는 914명이다. 이 중 24명은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19일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 변이주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역 당국은 격리 면제자에 대해 입국 후 활동 계획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중간에 유전자증폭검사(PCR)를 한번 더 실시하겠다”며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남아공 변이주에 대해서는 고위험 국가의 입국자 전체에 대해서 시설 격리를 22일부터 시행해서 국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전파력과 백신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인도발 ‘이중 변이주(B.1.617)’ 확산도 위험 요소다. 3월 이후 국내에서 확인된 인도발 변이주는 총 9건이다.

한편,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40대 여성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과 뇌척수염 간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 국내외에 없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성윤모(왼쪽 여섯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경수(왼쪽 네 번째) 경남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19일 경남 창원 의창구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열린 ‘K-수소트램 콘셉트카 기동 시연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차세대 도시교통수단 ‘수소트램’ 콘셉트카 공개

### 올해부터 수출형 사업 추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발된 수소트램 콘셉트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올해부터 해외의 수출형 수소트램 개발을 위해 핵심기술 국산화와 실차 검증 사업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경남 창원시에 방문해 코하이젠 본사 현판식(KOHYGEN), K 수소트램 콘셉트카 공개

행사,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등에 참여했다.

이날 공개된 수소트램 콘셉트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개발됐다. 올해부터는 약 450억 원을 투입해 해외의 수출형 수소트램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 및 실차 검증 사업도 추진한다.

수소트램은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하철처럼 대량수송이 가

능하면서도 지하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인 차세대 도시교통수단으로 기대된다. 또 수소 모빌리티의 다양화 측면에서 수소경제로의 조기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준공한 수소생산기지는 충전소와 직접 연계해 그 자리에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생산하는 시설로, 수소를 외부에서 공급받을 때의 높은 수소 운송비용을 낮춰 수소충전소의 수소 공급단가 인하 및 경제성 제고 효과가 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THE HYUNDAI SEOUL

SOUND OF THE FUTURE

# 더현대서울

현대백화점이 가장 진화된 미래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의도에 선보입니다



혁신적 공간 설계  
대규모 실내 정원 사운즈 포레스트



글로벌 콘텐츠 큐레이션  
12미터 높이의 인공폭포 워터폴 가든



미래형 테크놀로지  
AWS(아마존웹서비스)기술 기반 무인 매장 언커먼스토어

##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 \*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도보 5분
- \*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연결
-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더 많은 이들의 Life is Good!을 위하여

# 도전이 모여 만드는 혁신의 파장

OLED로 초고화질에  
눈건강까지 생각하는  
LG디스플레이 성세종

전기차배터리로  
청정한 미래를 이끄는  
LG에너지솔루션  
Camille Girard

고객맞춤형 디자인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LG전자 CX Lab 오민규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는  
LG화학 최정운



\* 본 광고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양자대결 오차 범위 내>

# 윤석열, 호남에서도 이재명·이낙연에 우세

## 리얼미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尹 37%·이재명 21%·이낙연 11% 順  
양자 가상대결도 20%p 안팎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 누구와 붙어도 과반으로 앞섰다. 다만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높은 배경에는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담겨 있어 추후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16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37.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21.0%로 2위, 이 의원은 11.0%로 3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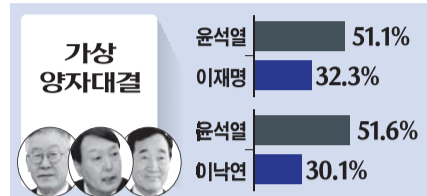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윤 전 총장이 이 지사, 이 의원과 양자 가상 대결을 했을 때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우세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와의 가상대결에서 51.1%를 기록했다. 이 의원의 가상대결에선 51.6%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32.3%, 이 의원은 30.1%를 얻는 데 그쳤다.

윤 전 총장은 광주와 전라, 충청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이 지사와 이 의원을 앞섰다. 광주와 전라에선 윤 전 총장이 41.4%, 이 지사가 40.8%로 대등하게 나타났다. 이 의원의 대결에선 윤 전 총장이 37.5%, 이 의원이 3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일시적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4월 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출처: 리얼미터

인 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윤 전 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7 재보궐선거 때 여론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감, 분노가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가 만약에 잘하면 모른다”며 “정치를 한 후 생각보다 잘하면 중도가 아니라 진보의 약한 고리에서도 윤 전 총장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4위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5.9%), 5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0%), 6위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3.2%) 순으로 나타났다. 7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4%)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9위는 유승민 전 의원(2.2%), 10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1.7%), 11위는 원희룡 제주도지사(1.0%), 12위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0.7%)이 차지했다. 기타는 1.1%, 부동층은 5.3%로 나타났다.

박상상 기자 jooonooon@



4·19 민주묘지 참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 기념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국민의 질책 ‘쓴약’ 여기고 새출발”

### 부동산·방역, 野·지자체와 소통 투자·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지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

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춰져 있다”며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는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

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아슬아슬한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방역대책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엇박자가 난다는 우려와 관련해 협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기업들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준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일환 기자 whan@

## “2년 전 집 문제 사죄드린다”

# 국회 입성하며 고개숙인 김의겸

### “언론개혁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서 직을 물려받은 김의겸 의원이 19일 처음 국회 공식회의에 출석했다.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며 여론이 패배한 재보궐 선거 덕에 흑석동 부동산 투기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 의원이 국회에 입성해 본격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김진애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이유로 스스로 직을 던지면서 다음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의원직을 승계했다. 그는 본회의 인사말에서 “우선 사죄의 말씀부터 드린다. 2년 전 있었던 제 집 문제 관련이다. 온 국민이 집값 문제로 불안에 떠는데 공직자인 제가 큰 돈을 들여 집을 샀다”며 “정치적으로 죽는 목숨을 국민 여러분이 넘어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 언론개혁이 제게 주어진 과제”라고 각오를 밝혔다.

본회의와 달리 앞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내내 함구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렵게 이 자리에 온 만큼 모자란 점을 보충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 많이 이끌어 달라”고 짧게 말했다. 이후 회의 내내 일절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전직 한겨레신문 기자라 이날 문체위에 상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의견을 피력할 법도 했지만, 일언반구



김의겸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도 하지 않았다. 대신 MBC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의 부적절성을 지적했고, 김 의원 보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숙과 자중은 고사하고 순번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리에 나섰다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2019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할 당시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상가를 26억 원에 매입해 투기 논란에 싸였고, 대변인직을 사퇴한 바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으로 향해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때 재차 논란이 일어났다.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다른 상임위(국토교통위)였는데 우리 위원회에 와 경험과 실력을 발휘한다는 거니 더 따뜻하게 맞아 달라”고 언급했다. 김은호 기자 uknow@

## 文, 22일 바이든과 화상 기후회의

### 내달 하순 美서 첫 대면 정상회담 “한반도 대화 복원·백신 협력 심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2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첫 한·미 정상통화를 한 바 있으며, 다음달 하순께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예정

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 화상면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변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주요 경제국포럼(MEF) 17개 회원국과 아시아 태평양·중동·유럽·미주 등의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2일 밤 9시~11시(한국시간)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하는 첫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기후행동 강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 홍남기, 국회대정부 질문 답변

▶1면서 계속

아울러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 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총리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과 관련해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하

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게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 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소급에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냈다.

이밖에 홍 총리대행은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 실적을 적

극 옹호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전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비치기도 했다. 홍 총리대행은 현재 백신 접종 속도로는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에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뉴스”라고 맞섰다. 정 의원이 “대한민국이 백신 빈곤국으로 전락했다”면서 정부의 백신 확보 및 접종 실적을 지적하자, 홍 직무대행은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한다”며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 명, 올해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제시했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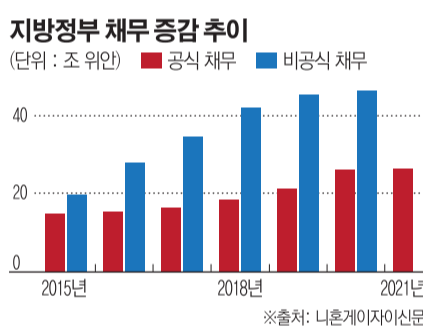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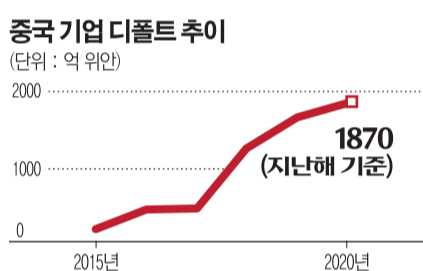




호주-뉴질랜드 '트래블 버블'... 1년 만에 가족 상봉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19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뉴질랜드에서 도착한 가족들을 맞아주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날 오후 11시 59분부터 상대국으로부터 오는 방문자에 대해 의무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을 가동했다. 시드니/AFP연합뉴스

## 中 '인프라 리츠'로 빚청산 나선다

지방정부·국영기업 자금조달 목적  
공공사업 대상 리츠 첫 상장 준비  
운용 규모 856兆, 증시활력 기대



중국의 사상 첫 인프라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도입이 임박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이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19일 중국이 자국 고속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리츠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기관투자자를 통해 조달해 안정적인 재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리츠 규모를 총 5조 위안(약 856조 원)으로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증권감독관위원회(증감회)는 베이징시 대규모 쓰레기 소각로와 광동성의 고속도로, 선전시의 오수처리 시설 등 5건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했다.

과거에도 중국에 기관투자자를 위한 이른바 '유사 리츠'가 있었지만, 개인도 참여 가능한 리츠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 상장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리츠는 통상 오피스 빌딩이나 주택, 물류 시설 등 임대료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자산이 상품에 포함된다. 중국 정부가 리츠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과거 중국은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이 인프라 정비를 담당했다. 정부가 지원한다는 보증을 전제로 수많은 사업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부채 문제에 직면해 새로운 자금공급처가 필요해졌다.

중국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중성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비공개 부채는

2019년 말 기준 43조~45조 위안에 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던 지난해는 순증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앙 정부가 공개한 공식 채무도 올해 2월 기준 26조 위안에 달한다.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닛케이에 올해 공개와 비공개 부채가 총 70조 위안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리츠는 자금 조달과 부채 문제 완화는 물론 중국증시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18.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중국증시 벤치마크인 CSI300지수는 2월 연중 고점에 도달한 후 지금까지 15% 하락했다.

다만 리츠 도입에 장애물도 있다. 우선 인프라와 관련해 유망한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렵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로부터 얻는 수익을 도외시해 개발 기업이 적자 상태인 경우가 많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운영회사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70%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방정부나 국영기업으로부터 비싼 가격에 자산을 매입하는 등 외압에 따른 투자 리스크도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주식시장에서도 여전히 내부거래가 횡행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투명성이 낮다.

고대영 기자 koda00@

## 폭우·가뭄·폭염·식량난에 美 '기후 난민' 71% 급증

미국 남쪽 국경에 몰려든 난민이 한 달 새 70% 이상 급증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늘어난 난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급증 배경에 기후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멕시코 국경 리우그란데 강을 건너 난민들이 보트에서 내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3월 남쪽 국경을 넘어 미국 입국을 시도한 사람이 17만2000여 명으로 전월보다 71% 급증했다. 2019년 3월에 비해서는 34% 늘었다.

한 달 새 난민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으로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가 지목된다. 지난해 11월 허리케인 '에타'와 '이오타'가 잇따라 중미를 강타하면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에 걸쳐 폭우, 홍수, 산사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유엔 조사 결과 이들 나라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이재민은 약 730만 명에 달했다.

지역 주민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식량 불안정과 폭력, 빈곤 등 악순환을 낳으면서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국경을 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변화가 난민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돼 가고 있는 셈이다.

앤드루 하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기후변화 특별 고문은 "기후변화가 수십 년 간 내재된 취약성과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사람들에게는 떠나는 것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후변화가 난민 문제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가뭄처럼 해묵은 자연 재해에 허리케인 같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덮치면서 불안정성이 가중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CNBC는 실제 난민 서류 가운데 최소 3분의 1은

기후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급증하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 내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현재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난민 대부분은 공중보건 위협을 이유로 추방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난민 수용 인원을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정한 1만5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거센 여론의 질타에 전날 결정을 철회했다.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도 난민을 더 받아들이는 것은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기후 변화 이슈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난민 문제도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러 블라제 베르메오 듀크 대학 공공정책 및 정치공학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여파가 계속될수록 더 많은 난민 물결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국가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특히 중미처럼 취약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재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우주 헬리콥터' 화성하늘 날았다

나사 "지구 이외 행성서 첫 동력비행" 우주개발 새 역사

3미터 높이 30초간 정지비행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우주 헬기 '인저뉴어티(Ingenuity)'가 현지시간 19일 화성 하늘 비행에 성공했다.

이는 최초로 인류가 지구 이외 행성에서 '제어가 되는 동력체'를 비행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 동력 비행에 성공한 날과 비견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인저뉴어티에 당시 사용됐던 플라이어 1호기 조각이 부착되기도 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헬리콥터 '인저뉴어티(Ingenuity)'가 19일(현지시간) 첫 화성하늘 비행에 성공했다. 사진은 화성 표면에 그려진 인저뉴어티의 그림자. 사진제공 NASA

NASA에 따르면 한국시간 19일 오후 4시 30분 인저뉴어티 비행이 시도됐고, 약 3시간 뒤에 비행에 성공했다는 비행 정보가 지구에 도착했다. 이륙 후 초속 1미터 속력으로 3미터 높이까지 상승해 30초간 정지비행을 하고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모된 동력을 태양에너지로 재충전기 위해 수면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 시도는 앞서 NASA가 화성시간으로 30술(1술은 24시간 37분 23초) 내 하겠다고 밝힌 다섯 차례 중 첫 번째다. 즉, 네 차례 더 시험비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저뉴어티는 지구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화성 대기 밀도를 극복하기 위해, 보통 헬기보다 8배 정도 빠른 분당 2400회를 회전하는 탄소섬유로 만든 날개 4개가

달려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화성 표면에서 이륙하는 건 지구에서 고도 10만 피트(약 30킬로미터)로 비행하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어떤 헬기도 그 정도 높이에서 비행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NASA는 인저뉴어티 제작에 한화 950억3000만 원에 상응하는 8500만 달러를 들였고, 이것을 품고 화성을 향한 탐사로버 '퍼서비어런스' 개발에 약 3조 원인 27억 달러를 투입했다. 이처럼 고비용이 드는 도전에 나선 건 화성 탐사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어서다. 1997년 화성을 돌아다니며 탐험하는 시대를 연 첫 탐사로버 '소저너'와 같은 역할을 해줄 비행로봇을 만들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 '자율주행 오작동 추정' 테슬라 승객 2명 사망

"사고 당시 운전석에 아무도 없어" 배터리 안전 우려도 커져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차량 충돌 사고로 남성 2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자율주행 안전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우드랜드에서 전날 밤 2019년형 테슬라 '모델S'가 주행 도중 나무와 충돌해 불길에 휩싸이면서 탑승자 두 명이 사망했다. <사진> 사망자는 59세 남성과 69세 남성으로 조수석과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경찰 관계자는 "한 명은 조수석에, 다른 한 명은 뒷좌석에 있었다"면서 "오후 11시 25분쯤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방향을 틀지 못해

도로를 30m 정도 벗어나 나무와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조사이지만 현장 조사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다고 99.9%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관련 기능인 '오토파일럿'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24건 이상의 충돌 사고에 대해 오토파일럿 기능이 관련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휴스턴 경찰당국은 "보통 몇 분이면 끝나는 화재 진압인데 이번 사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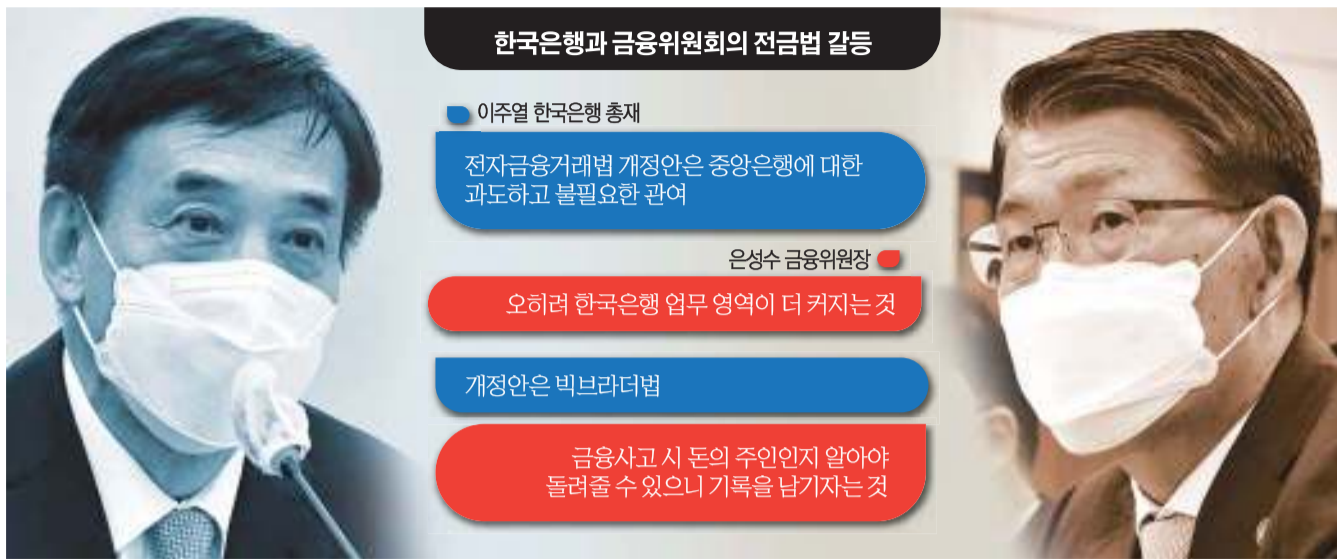
소방관들이 진압하는 데 4시간이 걸렸고 12만 l의 물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해리스카운티 소방당국의 수석 조사관 미첼 웨스턴은 "배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고속에서 충돌할 경우 배터리 내 다른 물질 사이에 통제 불가능한 접촉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게 화재로 이어지고 심지어 진화가 끝난 후에도 다시 점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한은·금융위 갈등에 새우등 터진 '중소 핀테크'

**'디지털뉴딜' 전금법 국회 표류  
계좌·송금 라이선스 도입 발목  
금융권 "빅테크 위한 법" 반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전금법이지만 한은-금융위원회, 기존 은행-빅테크 업체 갈등 등이 겹쳐지지 않자 국회가 속도를 낼 수 없어서다. 전금법의 국회 표류에 중소 핀테크 업체들은 사업 영역을 확장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힌 신세가 됐다.

1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에 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전금법이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법안소위에서 어떤 법이 논의될지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간사와 야당 의원 간사의 합의로 이뤄진다. 전금법의 경우 정부 위원회다. 야당은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금법으로 기관 간 파열음이 있었고, 금융업권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위 관계자는 "이달 통과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 수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전금법 갈등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
-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히려 한국은행 업무 영역이 더 커지는 것
-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 금융사고 시 돈의 주인인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자는 것

이 아니라 방대한 법이라 2~3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금법은 정부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법안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업자)의 신규 라이선스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은행의 고유 업무인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 기반의 송금 서비스 등을 종지업자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금법은 또 모 든 종지업자에게 외부 청산 시스템을 두게

하고 청산 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지정했다. 종지업자가 폐업해 고객의 돈을 찾을 수 없을 때를 대비해 금결원을 청산 기관으로 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이 촉발됐다. 한은은 전금법에 규정된 금결원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관리는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라며 반발했다. 금결원이 금융위의 피감기관인 것도 한몫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금법으로 금융위가 금결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의 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빅브라더(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한다는 뜻)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총재의 말은) 지나치게 과장"이며 "조금 화가 난다"고 맞받아쳤다. 금융 사고에 대비해 금결원을 세운 것이지 거래 내역을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뜻에서다.

금융사들은 전금법이 빅테크를 위한 법이라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종지업자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어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법률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규제 차익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권 관계자 역시 "종지업자의 후불결제업은 신용카드 여신 제공과 효과가 동일하다"며 "개인 결제 한도, 총 제공 한도, 가맹점 수수료 등 핵심 영업 규제에 대해 신용카드업의 규제 수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관 간, 금융업권 간 갈등으로 전금법 처리가 늦어지자 애타는 건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다. 종지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 등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사업 아이디어 구현이 늦어지면서 중소 핀테크 업체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전금법은)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에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전금법이 시행된다면) 최소자본금으로 소형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시험해볼 기회"라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 KB저축은행, 감사위원 임기 3년으로 연장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차원  
경영전제로 지배구조 선진화**

것으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 규정에서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

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이사에 한해서만 임기를 3년 임기로 늘린 것"이라며 "감사위원들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내이사들의 임기는 통상 1년 단위로 선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감독 역할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저축은행권에서 ESG(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KB저축은행 역시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ESG 경영이 확대되며 금융권에도 지배구조의 선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외이사 임기 연장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라는 점에서 감사위원의 임기 연장만으로는 경영진의 전횡 견제라는 감사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감사위원 후보 선정부터 선임까지 KB금융지주의 임금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의 임기만을 연장한다고 해서 독립성이 보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설명이다. 실제로 KB저축은행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에서 사외이사의 후보 추천 경로에 대해 "KB금융지주의 HR 부서의 추천을 받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퇴직연금 갠 사유 절반은 "주택 구입·임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절반가량이 주택 구입 및 주거 임차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7만2830명, 2조7758억 원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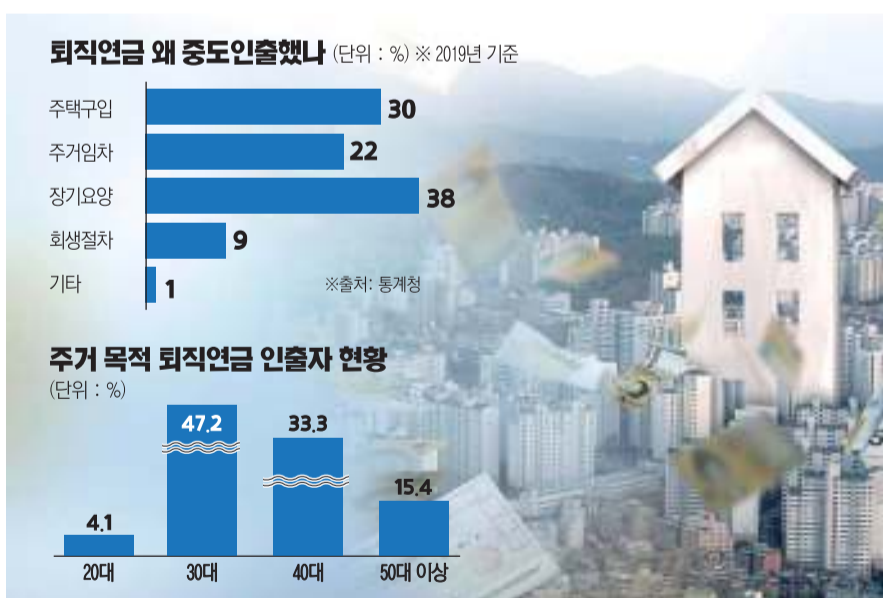
2015년 중도인출 인원이 2만8080명, 금액이 964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모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도인출 사유를 살펴보면 주거 마련 목적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주택 구입 목적이 2만2023명(30%), 주거 임차 목적이 1만6241명(22%)이었다.

세대별로는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택 구매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30대는 1만391명으로 전체 주택 구매 목적 중도인출자의 47.2%에 달했다. 전·월세 임대 등 주거 임차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30대도 8131명으로 전체의 50.1%에 달했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대를 중심으로 주거비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높은 것은 결혼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한 목돈마련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맞물려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참가하는 젊은



## 2015년 9648억→2019년 2조7758억 급증 30대 가장 많아... "국민 노후소득 감소" 우려

층이 늘어난 것도 퇴직금 중도인출 수율을 키운 요인이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향후 국민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중도인출 완화를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금의 25%를 중도인출한다면 연금자산은 14.2%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입 후 15년과 20년 시점에 각각 25%씩 인출할 경우 연금자산은 28.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최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자산 보전 측면에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30대와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씨티銀, 27일 이사회서 '출구전략' 논의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27일 씨티그룹이 발표한 국내 소비자금융 출구전략 추진 방안에 대해 이사회를 열고 논의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주 이사회에서 소매금융 통매각, 여·수신 및 카드, 자산관리(WM) 등 사업재편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지난주 씨티그룹이 한국 등 총 13개국에서 소매금융에 대한 출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도 씨티그룹 발표 직후 "한국씨티은행 경영진과 이사회가 함께 추후 가능한 모든 실행 방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대출, 예금, 신용카드 등 소비자금융 사업에서는 손을 떼지만 기업금융 사업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소비자금융 사업 통매각, 자산관리(WM)와 신용카드 등 각 부문의 별도 매각,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폐지하는 수순 등 3가지 방식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터 바베지 씨티그룹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경영자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아시아 국가에서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하는 대신 부유층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 푸본현대, 그룹 60주년 이벤트

푸본현대생명은최대주주인푸본그룹의 창립 60주년을 맞아 고객과 직원이 함께하는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만에서의 추억이 담긴 여행사진을 푸본현대생명으로 보내면 선정을 통해, 여행 상품권과 여행용 미니파우치를 시상하고,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에서 지원하는 한글 판 대만 가이드북 및 가이드맵도 전달한다.

현대카드 쿠킹 및 트래블 라이브러리에서는 주배안, 정지선 셰프와 함께하는 대만 요리 쿠킹 클래스와 대만 타이중 만나

는 트래블 토크를 시행하며, 만기도래고객과 담당 FP를 대상으로 '푸본현대생명 스토리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사내에서는 대만에서 온 임직원과 함께하는 대만 요리체험 유튜브 영상제작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푸본그룹창립 60주년 기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참여방법은 푸본현대생명 모바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푸본현대생명 이재원 사장은 "푸본그룹 창립 60주년 맞아, 고객과 임직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림의 공간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시민 향해 흔들림 없이!

#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서울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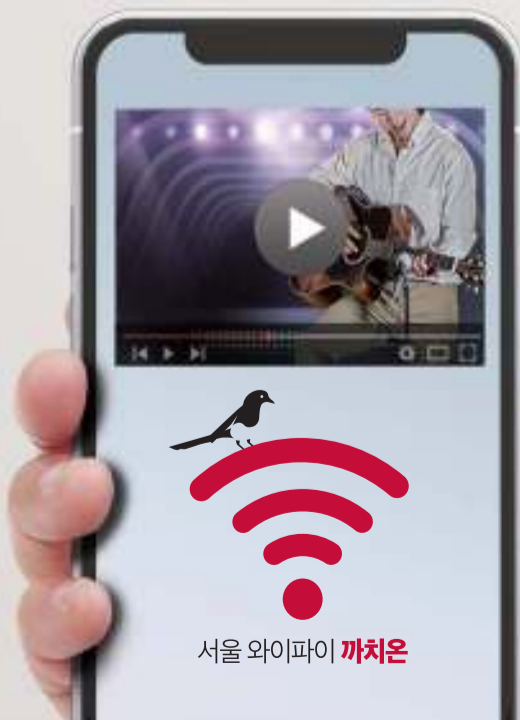


공원에서

전통시장에서

버스, 공공시설에서

좋아하는 영상콘텐츠 시청도 맘대로!



## 공공생활권 어디서나 와이파이를 무료로! **까치온**

- ① 거리, 공원, 복지·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생활권에서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 ② 'SEOUL\_Secure'를 선택 (ID: seoul / PW: seoul)
- ③ 안드로이드: EAP 방식(PEAP), CA인증서(인증안함) 아이폰: 인증서 신뢰
- ④ 1회만 설정해두면 이후엔 까치온이 설정된 곳 어디서나 자동연결

문의처\_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0022

※'까치온'은 서울 시민이 무료 인터넷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서울 공공와이파이의 이름입니다

까치온 지도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공정 성과관리' 드라이브 “年 2회 인사평가 정합성 확보”

“부진함 독려·고성과자는 보상 피드백 통해 공정한 문화 정착”



사상은 전 임직원 대상의 설명회를 실시해 구성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성과급과 임금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는 가운데, 구자균(사진) LS일렉트릭 회장이 공정한 성과관리와 평가를 강조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19일 LS일렉트릭에 따르면 구자균 회장은 최근 사내 메시지를 통해 “제대로 성과를 낸 사람이 진급하고,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받는 것이 옳바르고 공정한 기업문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성과관리와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우선적으로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합성 확보를 위해 분기마다 평가를 시행하고자 했었다”며 “우선 올해는 연 2회, 반기 단위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분기 평가(연 4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구 회장은 인사 정책과 관련해 소통도 활발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1년 동안 인사 정책과 관련한

성과 관리의 핵심은 ‘피드백’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구 회장은 “성과가 부진한 직원에게는 성과가 향상되도록 독려하며, 고성과자는 그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과관리의 근원적인 목적”이라며 “따라서 올바른 성과관리의 핵심은 명확한 ‘피드백’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짚어주고, 이를 개선하고 더 발전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성과관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이 같은 공정한 성과관리에 대한 언급 외에도 임직원들에게 ‘사업’과 ‘기업문화’ 양면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먼저 글로벌 마인드 내재화와 글로벌 역량 향상을 요구했다. 그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매크로 경

영은 전통적인 수직 관계가 아니라 ‘일과 성과 중심’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간 우리의 성장을 견인해온 신뢰성,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고객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글로벌 마인드가 내재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R&D) 측면에서 10년 넘게 투자를 아끼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혁신적인 신기술, 신제품이 부족한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장인정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객의 요구에 기반한 업무수행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수평적 소통문화의 정착도 당부했다. 그는 “연령별, 직급별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수평적 조직에는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보다는 ‘역할과 소통’을, ‘비난과 뒷담화’가 아닌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혁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다. 실행하지 않은 순간 끝이 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현실에 안주하는 속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송영록 기자 syr@

# ‘R&D신화’ 속 주인공은 옛말 복지 좋은 곳이 ‘인재 블랙홀’

현대車로 갈아타는 LG맨

▶먼저 계속

성과급 논란이 인력 이동 촉발 재계, 대규모 경력직 채용도 한몫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본격적인 R&D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SK이노베이션 DT실도 채용에 한창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업모델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7월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공식화한 LG전자 사정도 마찬가지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주요 분야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가 본격화할 경우 일부 핵심 인재 이탈을 감내해야 할 전망이다.

이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준 것은 현대차 그룹이다.

미래차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이른바 C.A.S.E로 집결된다. 이는 △커넥티비티(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카 셰어링(Sharing) △전동화(Electrification)를 의미한다.

LG전자 출신의 연구원들은 현대차그룹이 ‘커넥티비티’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 절대적인 존재다. LG전자 출신의 경력직 인재들이 대거 현대차그룹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은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전부터 나왔다.

때맞춰 현대차 연구개발본부는 28일까지 전 부문에서 대대적인 경력직 연구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전자시스템, 전동화 선행개발, 기술경영, 로보틱스, 디자인 등 11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연구개발 부문의 우수 인재를 공격적으로 채용해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과 역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성과급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정의선 회장이 지난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개선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이들을 영입할 당근책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과 진급의 구분이 뚜렷했던 현대차그룹의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 기업 문화가 개방형으로 전환하면서 핵심 인재의 현대차 집결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한 회사에서 성공해 R&D의 신화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직원은 많지 않다”며 “성과급이 더 공정하고 복지가 좋은 직장으로 망설임 없이 이직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전했다.

# 항공업계, 코로나 이전보다 국내 여객 늘었지만 ‘올상’

국내선 탑승객 2년 전보다 17% ↑ 국제선 탑승객은 90% 이상 줄어

최근 국내선 탑승객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해인 2019년보다 늘어났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여전히 국제선 비행을 제대로 띄우지 못해 당분간 가시발길을 걸을 전망이다.

19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1~15일 기준 주요 항공사 7곳(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에어서울)의 국내선 탑승객 수는 286만9780명이다.

지난달 같은 기간(232만9738명)보다 23% 늘었다. 2년 전(244만7780명)과 비교해도 17% 증가했다. 국내선 탑승객 수 증가는 코로나19 확산세 장기화로 지친 사 람들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여행을 택한

주요 항공사 국내선 탑승객 수 추이 (단위: 명, 각 달 1~15일 기준)



데 따른 결과다.

항공사들의 경쟁적인 가격 인하 경쟁도 국내선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에어부산은 이달에 국내선을 편도 기준 8200원부터 탑승할 수 있는 항공권을 판매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말부터 11일까지 국내 8개 노선 항공권을 편도 중

액 1만 원부터 판매하는 행사를 했다. 다른 항공사들도 국내선 항공권 가격을 1만 원대에 내놓고 있다.

국내선 회복에도 항공사들의 표정은 좋지 않다.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 수요가 여전히 움츠러들어서다. 1~15일 기준 국제선 탑승객 수는 예년보다 90% 이상 감소한 5만4353명에 그쳤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들보다 여객 사업 의존도가 상당히 큰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입을 타격은 더욱 막대하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연결기준) 영업손실 62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LCC들도 적자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화물 사업에 힘입어 흑자를 달성할 확률이 높은 대형항공사들과 대조적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G전자가 명품 보석 브랜드 불가리(BVLGARI)와 협업해 스위스 제네바와 취리히에 위치한 불가리 매장에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을 전시하고 VIP 고객 초청 행사를 열었다. 스위스 취리히 소재 불가리 매장을 찾은 고객이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 ‘불가리’ 손잡은 LG 시그니처 올레드 R

VVIP 고객 특화 공동 마케팅

LG전자는 최근 명품 보석 브랜드 불가리(BVLGARI)와 협업해 스위스 제네바와 취리히에 있는 불가리 매장에 현지 거 래선과 양사 VVIP 고객을 초청해 세계 최초 롤러블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을 소개하는 프라이빗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R 해외 출

시에 맞춰 진행되는 VVIP 고객 특화 마케팅의 일환이다. 이러한 정통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공동 마케팅은 VVIP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LG 올레드 TV의 팬덤(Fandom)을 보다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불가리는 세계 최대 명품그룹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보유한 브랜드 가운데 하나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한국조선해양, VLCC 2척 수주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 총 2080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동급 선박에 대한 옵션 1척이 포함돼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0m, 너비 60m, 높이 29.6m로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스크러버(탈황장치)가 설치돼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4분기부터 차례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LG화학, 식물성 원료 제품 ‘ISCC Plus’ 인증

SAP·컴파운드 등 총 9개 제품

LG화학은 폐식용유, 팜유 등 재생 가능한 식물성 원료로 만드는 ‘Bio-balanced’ 제품에 대한 ISCC(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Plus 인증을 국내 최초로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인증 받은 제품들은 SAP(고흡수성수지), PO(폴리올레핀), PC(폴리카보네이트) 컴파운드 등 총 9개다. 관련 제품의 원료부터 생산, 구매·판매로 이어지는 밸류체인(Value Chain) 전체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ISCC Plus 인증을 획득했다.

ISCC Plus 인증이란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s)에 부합하는 국제인증제도다.

친환경 바이오 제품 등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ISCC는 투명 심사 기준과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친환경 인증 분야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화학은 이번 인증으로 친환경 바이오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 한화, 여수산단에 1900억 규모 질산 공장 건설

年 52만톤까지 생산량 확대

㈜한화 글로벌 부문은 2023년까지 총 1900억 원을 투자해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질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설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떠오른 반도체 세정제 등 정밀화학 분야로의 사업 전환도 본격화한다. 공장 건

설을 마치면(추천)의 질산 생산량은 52만 톤까지 늘어난다. 이 중 39만 톤은 자체 소비용 물량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증착 및 세정용 소재에 쓰인다.

한화 관계자는 “단순히 생산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밀화학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 갈 길 먼 게임사 'ESG' 환경부문 평가 모두 낙제점

ESG 기업 전반 확산하는데  
게임사 "제조사 아니라 무관"  
D등급 받은 사실 모르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필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대상인 게임사들이 '환경' 부문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사, 예외 없이 모두 'D' 등급 =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대상인 게임사의 환경 등급은 모두 'D'였다. 넥슨지티·넷마블·엔씨소프트·NHN·컴투스·펄어비스·웹젠·위메이드가 대상이다.

ESG 등급은 S, A+, A, B+, B, C, D 7 등급으로 나뉜다. D등급의 경우 ESG 관리체계 및 위험 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 경영성과 개선 노력이 있는지, 환경 정보 공개요구를 강화했는지, 전사적인 환경 경영

게임사 지난해 ESG 평가

	종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넥슨지티	C	D	B	C
넷마블	B	D	B+	B+
엔씨소프트	B+	D	B+	A
NHN	B	D	B+	B+
컴투스	B	D	B	B+
펄어비스	B	D	B	B+
웹젠	B	D	B	B+
위메이드	B	D	B	B+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리가 반영됐는지를 기준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평가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3년부터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해왔고, 2011년부터 사회적책임과 환경경영이 포함된 ESG 평가를 통해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모형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ISO26000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해 개발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서 D등급을 받으면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미흡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C등급을 부여하는데, 아예 공개하지 않으면 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5년부터 ESG 활동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적용 대상이다

◇ 환경 이슈, 아직은 생소하다는 게임사- ESG 평가가 기업 문화 전반에 퍼지고 있지만, 게임사들은 아직 환경(Environment)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모양새다. 실제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부분 게임사가 "(본인들은)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 환경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답을 내놨다.

환경 분야에서 D등급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예도 있었다.

게임사를 비롯한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전력 사용과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다. 24시간 데이터 센터 및 서버를 유지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막대한

양의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네이버가 2020 ESG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의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만7080tCO2e에서 2018년 7만2416tCO2e, 2019년 7만8712tCO2e, 2020년 7만9907tCO2e로 꾸준히 늘었다. 배출량 대부분은 데이터센터 각이 차지했다. 네이버는 동 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99% 이상이 전력에서 발생했다. 향후 10년간 데이터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한 사업 경쟁력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게임사의 ESG 평가 논의는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 3월 엔씨소프트가 ESG위원회를 출범,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 활동이 확정된 바는 없다. ESG위원회 출범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넷마블과 펄어비스 또한 추가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게임·IT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네이버의 경우 데이터센터 각에 차가운 공기와 지하수를 이용해 서버실의 온도를 낮추는 친환경 기술 AMU(Air Misiting Unit) 및 NAMU(NAVER Air Membrane Unit)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에 가까운 전력효율지수(PUE)를 유지하고 있다. PUE는 데이터센터의 효율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이며, 1에 가까울수록 전력을 많이 절감한 것이다. 네이버의 ESG 환경부문 평가는 B+다.

오덕고 한국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친환경 경영을 하라고 할 때 환경보전활동 같은 거창한 것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몇천 대 몇만 대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와 서버들의 사용량과 효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장 또한 "사용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부담이 없도록 하는 전략들을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조언했다.

박소는 기자 gogumee@

## 쌍용C&E "영월 매립장 안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철근 콘크리트 등 4중 차수시설로 침출수 유출 방지

쌍용씨앤이(C&E)가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 면에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엄격한 환경기준과 안전설계 등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쌍용C&E는 정부 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차수 시설 구축과 침출수 무방류 등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대책을 반영해 친환경 매립장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방안은 지난 9일 열린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이번 조성계획에는 지난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통해 사업지 내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등 4중 차수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내 일반폐기물 매립장 중에서는 처음이다.

쌍용C&E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방수

시트와 점도광물혼합토, HDPE(고밀도 폴리 에틸렌)로 견고한 차수 시설을 구축하고 침출수 누출감지 시스템을 추가해 환경 영향을 방지하겠다는 것.

쌍용C&E는 침출수 무방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부로의 침출수 방류 없이 매립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중금속류, 고농도 질소 등을 제거하는 물리·화학처리 과정과 정수기 필터에 활용되는 역삼투압 방식의 처리시설을 통해 정화한 뒤 쌍용C&E 영월공장의 공업용수로 전량 활용된다. 공업용수는 사용 후 전량을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하천에 방류되는 침출수는 전혀 없다.

쌍용C&E 관계자는 "국내보다 환경기준이 엄격한 영국의 란들라스 매립장의 경우 석회석 채석장 위에 HDPE와 점도 2중 차수 시설로만 조성됐지만, 현재까지도 문제가 없이 운영 중"이라며 "국내에도 석회암 지대

에 조성된 문경시, 정선군 등 매립장이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공동이나 싱크홀 발생, 침출수 누출 등 환경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쌍용C&E는 앞서 매립장 건설과 운영 등에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지역발전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금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립장 조성 이후에는 환경단체와 주민협의회가 참여하는 주민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보전 활동도 추진한다.

쌍용C&E는 올해 말 친환경 매립장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제기한 △지역주민 입회하여 추적자 시험 실시 △지질조사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및 해외 자문 시행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 시행한다.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포함해 지역환경청에 제출한다. 이다원 기자 leedw@

## 게임빌, 코인원 지분 13% 인수

게임빌이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코인원의 구주 13%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총 투자규모는 312억 원이다.

게임빌은 컴투스 및 계열회사를 포함한 전사적인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코인원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

게임빌은 이번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코인원과 함께 대규모 트래픽 처리기술, 해킹 대응 보안기술 등 기술 협력 뿐만 아니라 연관 사업의 글로벌 확장 등으로 폭넓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 산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미래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코인원은 화이트 해커 출신 보안전문가인 차명훈 대표가 이끄는 가상자산 플랫폼 기업이다. 뛰어난 보안 및 거래엔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박소는 기자 gogumee@

## 야놀자, 작년 영업이익 161억 '흑자전환'

매출 44% 쑥... IPO '청신호'

야놀자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했다고 밝히며 기업공개(IPO) 청신호를 켜다. 야놀자는 지난해 야놀자 본사의 별도 기준 재무실적을 19일 공개했다. 지난해 야놀자 본사의 K-IFRS 별도 기준 매출액은 1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8%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야놀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발 빠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는 슈퍼앱 전략, 글로벌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솔루션 확장에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견고한 매출 성장세와 함께 영업이익 개선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국내외 여행 및 레저 시장 회복과 교통·레스토랑 예약 사업 본격화에 따라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야놀자는 지난해 11월 기업공개(IPO)

야놀자 지난해 실적(단위: 억 원)



를 공식 발표하고 올해 IPO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그 동안 야놀자는 슈퍼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여행 플랫폼 전략을 필두로,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호텔뿐 아니라 레저시설·레스토랑·주거 임대 시장까지 다각화하며 성장해왔다.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 순 성장과 영업이익까지 달성한 만큼 계속해서 R&D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글로벌 1위 호스피탈리티 기업이자 여가 슈퍼앱으로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 트포 사라지는 골목상권

## ⑥ 이태원 경리단길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던 이태원 경리단길이 오가는 사람이 없어 한산하다.

## 임대료 상승·코로나에 상권 침체 'O리단길'의 원조, 쇠락의 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발 디딜 자리조차 없었던 이곳이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17일 방문한 경리단길은 조용했다. 젊은 '힙스터' 대신 주변 주민만 길을 오갔다. 즐비했던 카페와 소품 가게도 잠잠했다. 점포들은 비워졌고 문 앞엔 '임대' 팻말만 걸려 있었다. 폐업을 위해 설비를 뜯어내거나, 새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공사 중인 가게가 드문드문 보였다.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경리단길은 'O리단길'의 시초다. 지금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름이 바뀐 '육군중앙경리단'이 길 초입에 위치해 경리단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경리단길은 '힙(Hip)'의 중심이었다. 이국적 음식을 팔거나, 분위기 좋은 가게가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유행을 좇는 젊은이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가는 사람들이 늘고, 이색적인 점포들이 속속 문을 열자 상권도 활발해졌다.

그랬던 경리단길의 쇠락은 2018년부터 가시화했다. 상권이 커지면서 임대료가 올랐고 문을 닫는 가게가 늘었다.

경리단길 뒤편에 거주한다는 조모(64) 씨는 "주말이면 길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는데 3~4년 전부터는 많이 조용해졌다"며 "특히 저녁 시간에 조용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확산이 발생하며 주변 상권이 급격히 침체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감염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맹기훈 이태

원관광특구연합회장은 "코로나 19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펍과 카페가 남아 있던 경리단길은 영업제한·집합금지로 직격탄을 맞았다. 문을 닫은 펍의 개수가 많았고, 큰 식당에도 '임대' 표시가 붙어 있었다.

한때 경리단길에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이 모(27) 씨는 "지난해 말 즈음 일하던 카페가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그는 "카페 영입이 어려워지고 집합제한·영업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면 서 어렵단 말을 들었다"며 "(사장님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고 했다.

수년째 경리단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해 이태원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없던 손님이 더 줄었다"고 설명했다.

안 하던 점심 장사를 하는 가게도 늘었다. A 씨는 "경리단길뿐만 아니라 이태원 인근 가게들이 배달과 점심 장사에 뛰어들었다고 한다"며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이라도 주려면 (점심 영업) 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들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인들은 상권 침체가 한두 해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B 씨(54)는 "이 동네가 죽은 건 최근의 일이 아니다"며 "코로나 19 때문에 확 죽긴 했지만 애초에 힘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가 오른 것이 1차 문제이겠지만 상권의 흐름이 빠르게 바뀐 것 같다. 지원해주겠다곤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이다원 기자 leedw@

# 롯데마트·쿠팡 '진격' 동남아는 유통가에 기회의 땅

롯데마트, 베트남 15호점 오픈  
싱가포르 진출 쿠팡, 임원 채용  
한류 인기로 사업 진출 부담 적고  
배달 정착돼 틈새시장 공략 유리

유통업계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거세다. 치킨과 라면 등 상품 수출이 전성기를 맞은 가운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 채널도 정조준하고 나섰다. 쿠팡도 첫 글로벌 영토 확장지로 싱가포르를 낙점하며 공세를 높인다. 유통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특히 동남아는 K드라마와 K팝을 필두로 한류 문화가 형성돼 사업 진출이 용이한 데다 인구수 6억5000만 명 중 30세 이하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블루오션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남아는 '그랩' 등 배달 서비스도 정착돼 있어 유통 채널들이 신규 사업으로 틈새 시장을 뚫기에도 유리하다.

◇대형마트, 중국서 동남아로 눈 돌려= 롯데쇼핑은 롯데마트가 20일 베트남 나트랑 칸호아에 위치한 골드코스트 쇼핑몰 내에 '골드코스트점'을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점포는 롯데마트의 베트남 15호점이자 해외 점포로는 64번째 점포다. 롯데마트는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에서 49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이 점포는 베트남 대표 휴양지인 칸호아성 나짱시에 위치해 있으며, 아파트, 오피스, 영화관 등이 입점한 주상복합형 '골드코스트' 쇼핑몰 3~4층에 매장 면적 1081평 규모로 들어선다.

롯데마트는 2007년 중국에 진출해 100여개 점포를 운영했지만, 중국의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정치 리스크로 2018년 철수했다.

2008년 베트남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15개의 점포와 빠른 배송 서비스로 꾸준히 공략하고 있다. 이 업체는 자체 앱인 '스피드 엘(SPEED L)'과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Grab)의 오토바이 배송 서비스인 '그랩 익스프레스'를 활용해 1시간



롯데마트가 20일 베트남 나트랑 칸호아에 위치한 골드코스트 쇼핑몰 내에 문을 여는 '롯데마트 골드코스트점'. 사진제공 롯데쇼핑

내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베트남 배달 매출은 80% 가까이 오를 정도로 호응이 높다.

◇쿠팡, 싱가포르 임원진 채용=쿠팡도 미국 증시 상장에 따라 확보된 자금력으로 동남아 사업에 나설 태세다. 현재 쿠팡은 싱가포르 법인을 운영할 운영책임자(Head of Operations), 물류책임자(Head of Logistics), 소매책임자(Head of Retail) 등 임원진을 채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력 채용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 배송 사업과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싱가포르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후크(HOOQ)를 인수해 이를 기반으로 작년말 국내에 쿠팡 플레이를 론칭했다.

쿠팡이 첫 해외 진출국으로 싱가포르를 점찍은 것은 인구가 집중된 도시국가로 물류 인프라를 갖추는 비용이 적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이커머스 사업에 유리하다는 점이 꼽힌다. 코트라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9년 78%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인구가 집중돼 빠른 배송 사업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CU·이마트24의 말레이시아 도전=BGF리테일도 지난 1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CU 1호점인 CU센터포인트 점포를 오픈했다. 이 점포에는 열흘간 현지 소비자 1만1000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한국 편의점 평균 대비 3.3배 높은 수치다.

개점 당일부터 해당 점포 앞에 100m가

넘는 대기 줄이 생기고, 유명 유튜브 등 인플루언서들이 방문 후기를 작성, 현지 언론도 기사화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CU는 향후 5년 간 500점 이상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24도 연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CU와 대결을 벌인다. 이마트24는 최근 말레이시아의 한 식품업체와 현지 점포 개점을 위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개점 시점을 논의 중으로 올 상반기 개점이 목표"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도 적극적으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2018년 진출한 베트남에서는 지난달 100호점을 오픈했으며 2028년까지 베트남에서 2000개 점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 점포는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배달 의민족이라 불리는 고비에트(Goviet)와 나우에 입점해 서비스에 나섰고, 올해 1월부터는 그랩과 제휴해 배달에 돌입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올해 배달 실적은 지난해 월평균 대비 6배 가량 늘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남양 2개월 영업정지에 발효유 시장 재편 가능성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징계  
생산량 40% 세종공장 '타격'  
경쟁사들 '1+1' 마케팅 나서

'불가리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를 주장했던 남양유업이 결국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유업계가 남양유업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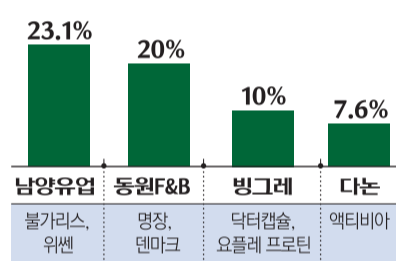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정지 2개월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최고 수준의 징계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일 유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영업정지로 액상 발효유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액상발효유 시장 규모는 450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남양유업은 전체 시장의 23.1%를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다. 동원F&B(20%), 빙그레

액상 발효유 시장 점유율 ※출처: 각사



(10%), 다른(7.6%) 등이 2~4위에 포진해 있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공장이다. 남양유업이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양유업의 행정처분 배경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연구결과 발표 때문이다. 이날 발표 이후 남양유업의 주가가 폭등한 것은 물론 일부 점포에서 제품 품귀현상까지 빚어진 바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 내용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면서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갑질논란이 빚어진 2013년 이후 8년 만에 불매운동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2주간

남양유업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양유업이 세종시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진행해 영업정지가 벌금 등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소비자 불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양유업은 아직까지 세종시의 처분에 대한 대응책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2개월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행정소송 후폭풍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의 2개월 영업정지로 액상 발효유 1위 기업이 바뀔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시장의 4분의1을 차지하는 1위 제품의 물량이 부족해질 경우 경쟁사들이 1위가 없는 틈을 타 매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들은 벌써부터 '1+1', '2+1'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바꾸기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장 판도 변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신세계계 "건강하게 집콕하세요" 신세계백화점이 집에서 즐기는 헬스케어 상품을 소개한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22일까지 '헬스&뷰티 홈케어' 테마 행사를 열고 운동기구부터 셀프 뷰티 케어까지 집에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신세계 본점 신관 1층 중앙 행사장에서는 실내에서도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는 러닝머신과 사이클을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마이런 러닝머신 560만 원, 바이크퍼스널 사이클 1180만 원 등이 있다. 뷰티케어 제품도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한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 GS25 "무신사·젝시믹스 상품 팝니다"

GS리테일, 패션 사업 강화

7월 GS홈쇼핑과의 통합을 앞둔 GS리테일이 패션 카테고리 강화에 나선다.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 및 애슬레저 의류 브랜드 전문 업체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과 협력해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이들 상품 판매를 비롯해 배달과 택배 서비스에서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GS리테일과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가 △결제 시스템의 독점 연동 △무신사 자체 브랜드 패션 상품의 판매 △상호 간의 보유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협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고객이 편의점 GS25에서 독점적으로 현금 결제를 통해 무신사 스토어의 패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의 구축을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가 없거나 온라인 결제가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무신사 스토어의 이용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부터는 GS리테일의 주요 소매 플랫폼에서 무신사의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상품이 판매된다. GS리테일

은 적합한 상품 내 GS25와 팔라블라 매장을 선정해 무신사 전용 매대를 구성하고 티셔츠, 드로즈, 마스크, 립밤 등 기본 패션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GS리테일의 1만5000여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반값택배, 박스25(택배 보관서비스), 우리동네달리버리 등 고객 접점의 물류 서비스와 무신사의 840만 온라인 회원 간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신사업 협력과 차별화 된 마케팅 활동을 앞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 매장 입점을 통한 홈트 판매채널 확대 △젝시믹스, 휘아 등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의 파워브랜드 소비자 접점 확대 △홈트시장 선점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고도화 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GS25 주요 편의점에서 젝시믹스 셀라업텐션 레깅스를 비롯 부위별 마사지와 스트레칭이 가능한 밸런스볼, 아사나링 등 홈트 제품 6종 등을 만날 수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 SSG닷컴서 산 아이폰, 이마트에서 받는다

'애플 옹니 서비스' 선보여

이마트와 SSG닷컴이 O2O 협업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낸다.

이마트는 애플코리아 상품을 SSG닷컴으로 구매하고 배송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마트에이스토어(A Store)에서 수령하는 간편한 '애플 옹니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배송이 불가한 주류를 제외하고 O2O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양사가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21일 이마트 10개점에 입점한 에이스토어에서 먼저 선보이며, 5월 3일부터 전국 55개점 이마트 에이스토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서비스 오픈 점포는 이마트 성수점, 산본점, 죽전점, 연수점, 왕십리점, 군산점, 만촌점, 강릉점, 전주점, 창원점 내 에이스토어다.

'애플 옹니 서비스'는 SSG닷컴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기타 액세서리 등 애플코리아 상품 중 '이마트몰' 태그가 붙은 '매장픽업'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결제 화면에서 원하는 픽업 매장과 날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결제 후 휴대



폰으로 발송된 교환권 번호를 통해 이마트 에이스토어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애플 옹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5월9일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이폰12 전품목' 구매 시 '벨킨 강화유리필름' 증정 및 부착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패드·맥북·애플워치 구매 시 '애플케어+'를 50% 할인한다. 남주현 기자 jooh@

# “서민용 맞나?” 민간 아파트보다 비싼 공공재개발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면제 ‘흑석2’ 3.3㎡당 4224만원 예고  
“서민 위한 공공성 잃어 실수요층에 외면받을 것” 비판  
정부가 나서서 분양가 통제 댄 사업장 반발 이탈 우려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대책인 ‘공공재개발’ (공공 참여형 재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도 더 비싼 값에 분양될 상황이다.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꺼내든 공공재개발 단지의 일반 분양가가 서민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공급 정책이 명분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고 예상 분양가를 공개했다. 흑석2구역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정된 첫 사업이다.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132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날 것인 게 SH 계획이다.

이날 SH가 밝힌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4224만 원. 이대로 분양가가 확정되면

흑석2구역엔 흑석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들어선다. 지난해 청약 받은 흑석3구역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3.3㎡당 2813만 원에 분양했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따져봐도 이들 두 구역 분양가는 6억 원 가까이 차이(흑석2구역 전용 84㎡형 약 13억 원·흑석 리버파크 자이 전용 82㎡형 7억 원) 난다.

흑석2구역이 이처럼 후하게 분양가를 받을 수 있던 건 분양가 상한제 면제 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장엔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흑석동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이지만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덕분에 이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대신 흑석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

아파트명	공급면적 3.3㎡	전용면적 84㎡	비고
아크로리버하임(흑석7구역)	5880만 원	20억 원	실거래가
흑석리버파크자이(흑석3구역)	2813만 원	7억 원	분양가
흑석2구역	4224만 원	13억 원	분양가 상한

<b>분양가상한제</b>	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적정이익)를 더해 최고 분양가 산정. 시·군·구 분양가심의위가 결정
<b>HUG 고분양가 심사</b>	주변 1년 이내 분양 단지와 기존 단지 시세 90%까지 반영. 단지 규모와 브랜드, 입지 등도 고려

올해 초 HUG가 고분양가를 심사할 때 주변 단지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흑석2구역은 분양가를 더 후하게 받았다. 흑석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 시세가 3.3㎡당 5900만 원에 형성돼 있어서다. 시세가 아닌 건축비와 땅값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에선 상상 못 할 일이다.

문제는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수요자로서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현행 대출 규제로는 13억 원짜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주택담보대출로 최대 4억 원 남짓만 받을 수 있다. 흑석2구

역에서 전용 84㎡형 집을 분양받으려면 남은 9억 원은 현금으로 마련하든지 다른 금융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면서 고분양가를 부추긴 면이 있다”며 “공공재개발이 공공성을 갖추려면 싼값에 분양해 주변 집값을 끌어내려야 한다. 지금은 서민을 위한 공공성은 놓치고 토지주 이익만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공기업들로서도 고민은 있다. 분양가 상한제 면제 같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모집하기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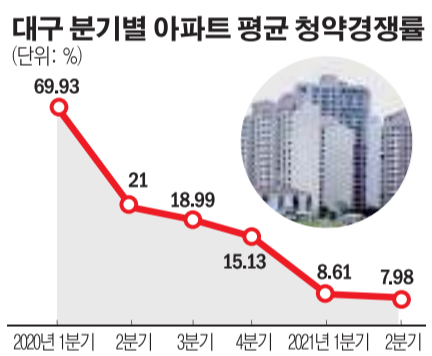
렵기 때문이다. 흑석2구역만 해도 애초 SH 등이 3.3㎡당 3200만 원을 분양가로 제시하자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불참까지 시사하며 배수진을 쳤다. 분양가를 마냥 낮추면 과도한 분양 차이가 생기는 ‘로또 분양’ 논란이 생기는 딜레마도 발생한다.

국토부도 이런 딜레마를 의식해 공공재개발 사업장에 지분공유형 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 시점에선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 지분 일부를 이전하고 이후 거주 기간에 따라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 분양가 마련 부담은 줄이면서도 분양 차이가 과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아직 제대로 시장 검증 받은 적 없다는 게 맹점이다.

흑석2구역 선례를 본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장들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 공공재개발 사업장 관계자는 “아직 분양가에 관한 방침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를 요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장 집행부도 “곧 사업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며 “추가 부담금 없도록 최대한 용적률·분양가 상향을 요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공급폭탄에 로또분양 실종, 청약열기 식은 대구

올 청약 경쟁률 한 자릿수 추락  
동구 ‘안심 파라곤’ 미달 사태  
HUG ‘고분양가 심사제’ 영향도



대구 분양시장 열기가 급속도로 식고 있다. 수십, 수백대 1에 달하던 청약 경쟁률이 지금은 미분양을 겨우 면하거나, 일부 단지에선 모집 가구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뜨거웠던 분양시장 분위기가 불과 3~4개월 새 확 바뀐 것이다. 밀려드는 분양·입주 물량과 사라지는 ‘로또 분양’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9일 기준 대구의 올해 신규 아파트 분기별 청약 경쟁률은 1분기와 2분기 각각 8.61대 1과 7.98대 1을 기록했다. 대구에서 분기별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2017년 1분기(3.12대 1) 이후 4년 만이다. 연평균 청약 경쟁률도 올해 현재 8.32대 1로 작년(21.86대 1)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꺾였다.

실제 이달 동구 울암동에서 나온 ‘대구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 (759가구)는

712가구를 모집했지만 총 청약자 수는 384명에 그쳤다. 1순위 청약은 0.29대 1로 마무리 한 이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동구 각산동 ‘호반 씨밋 이스텔라’ (315가구)는 1.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전용 84㎡ B·C 주택형은 2순위에서도 미달됐다. 인근 신암동 ‘동대구역 엘크루에비뉴원’은 전체 청약 경쟁률 1.64대 1로 미분양을 겨우 면했다.

대구 청약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뚫고 과열 양상을 띠었다. 지난해 3월 중구에서 나온 ‘청라 힐스자이’는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무려 141.4대 1에 달했다. 같은 지역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도 세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일대 청약시장에 냉기류가 퍼진 건 전방위적 규제와 높아진 분양가, 공급 과잉 여파가 한꺼번에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편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일부 제외)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남·중구),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이 포함된다.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된 주요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수성 더밸리스 푸르지오 더샵(올해 2월) 1485만 원 △수성범물 일성 트루엘 레전드(올해 3월) 1671만 원 △힐스테이트 만촌역(올해 4월) 2454만 원으로 갈수록 치솟고 있다.

물량 폭탄도 청약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대구에선 지난 3년(2018~2020년) 동안 9만 채에 가까운 아파트가 공급됐다. 올해 나올 새 아파트는 작년(3만1241가구)보다 더 많은 3만6618가구에 달한다. 올해까지 2년 연속 증가세인 입주 물량도 내년(1만9604가구)엔 더 늘어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6월 다주택 稅폭탄 피하자” 강남구 아파트 증여 6배 폭증

3월 812건...강동구 307건  
노원·강서구도 100건 넘어

본세율에 10%포인트 더 높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면서 증여 건수가 크게 늘었다.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증가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3월 강남구 아파트 증여 건수는 812건이었다.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지난해 12월 84건, 올해 1월 65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월 129건에 이어 3월엔 6배 이상 늘었다.

이는 강남구 고가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들이 6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세금 증가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증여 규모는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2018년 6월 당시 832건으로 가장 많은 증여를 기록한 바 있다. 이 당시 정부는 2018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선 기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를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한다.

양도세는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있다. 이를 6월부터는 종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구에 이어 강동구(307건)의 3월 아파트 증여도 급증했다. 강동구는 증여 건수가 1월 176건, 2월 228건에 이어 3월에도 34.6% 늘었다. 노원구(139건)와 강서구(121건)도 3월 증여가 100건을 넘어섰다.

3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이재영 기자 lij0403@

## 지방 부동산 탈세·다운계약 의심 사례 244건 적발

국토부 거래분석기획단 첫 성과  
‘토지시장’ 모니터링 확대 계획

부터 11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2만5455건 중 외지인·미성년자 거래, 이상 거래 등 1288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244건은 불법 거래임이 의심된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162건, 탈세 의심 58건, 법인을 이용한 명의신탁 6건 등이다. 국토부는 탈세 의심 사례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사례는 각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범죄 행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불법 거래가 의심되고 지적한 부동산 법인 중엔 아파트 열 채를 8억 원에 샀으면서 관청엔 신고할 때 6억8000만 원으로 허위 다운(down) 계약

서를 작성한 곳도 있다. 국토부는 다운 계약서가 취득·양도소득세 탈루 행위라 보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3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전셋값 승계분 9000만 원을 뺀 2억6000만 원 전액을 사주에게 빌린 60대 투자자도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7일 부동산 거래 분석·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는 시세를 올리기 위해 신고가(新高價) 거래를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토지시장으로도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 서울 부동산 매수 37%가 40세 미만

‘40~59세’ 50% 이하로 줄어

서울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40세 미만 젊은 층이 ‘큰손’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소재 집합건물 매수인 통계 분석 결과 40세 미만 연령층 비중이 전체 매수인의 40%를 차지했다. 반면 40세 이상 59세 이하 계층의 매수 비중은 50% 이하로 줄었다.

올해 1분기 서울 집합건물 매매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한 매수인 연령별 비중은 40세 미만이 37.1%로 집계됐다. 이어 ‘40세 이상~59세 이하’ 46.9%, ‘60세 이상’ 16.0%로 조사됐다. 40세 미만 세대는 지난해 4분기 38.2%보다 1.1%포인트(p) 줄었지만

과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0세 미만 매수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전체의 39.3%에 달했다. 이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39.0%, 서울 37.1%,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34.2% 순이었다.

40세 미만의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19년 3분기부터 큰 폭으로 늘었다. 강남3구도 30% 이상으로 늘어났다. 마용성 지역은 40세 미만 매수 비중이 지난해 4분기 한때 46.2%까지 차지했다. 40세 미만 세대의 매수수요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 수요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 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 “공정명만으로 기술 유추 못해” 원심 확정 원고·피고 양측 상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 병과 관련한 작업환경측량보고서(작측보고서) 내용 일부가 공개된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한 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반올림 측은 2018년 백혈병·립프암 등에 걸린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1994~2015년 기흥공장과 화성공장의 작측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작측보고서에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

고용노동청에 제출된다.

고용노동부는 작측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작측보고서에 연구와 투자의 산물인 공정·설비 등 영업비밀이 담겨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요청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작측보고서 내 정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했고, 중앙행정심위도 공정명과 화학제 품명 등의 공개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반올림은 중앙행정심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작측보고서에는 공정·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허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 업체에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인 만큼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기흥공

장의 작측보고서 내 라인(Line), 층(F), 베이(Bay) 정보를 삭제한 △예비조사 결과 중 ‘측정대상공정’과 ‘부서 또는 공정명’ △작업환경측정개요 중 ‘부서 또는 공정’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인, 층, 베이 정보를 제외한 공정명만을 공개할 경우 다른 정보와의 조합 가능성이 없고, 공정명만으로는 공정의

순서와 면적의 배치 등을 계산하기도 어려워 경쟁업체로서는 삼성의 공정 배치 방식을 유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이 대부분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기술 유출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용 기자 deep@



봄맞이 모내기 준비 곡우를 하루 앞둔 19일 경기도 여주시 가남농협 자동화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모판에서 자라는 벼모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해 ‘수학 영향력’ 커진다 3월 모평 분석 “문과 불리”

올해 처음으로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치른 첫 모의평가 성적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 94%가 이과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11월 18일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 수능에서 문과생이 크게 불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입시 업체 등에 따르면 전국 1874개 고등학교 3학년 34만6950명의 3월 학력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학 선택과목 중 문과 학생이 주로 응시한 ‘확률과 통계’는 평균 30.54점이었지만 이과 학생이 대부분 선택한 ‘미적분’은 50.58점으로 20점 이상 차이가 났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국어·영어만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 수학과 탐구 영역은 따로 과목을 선택해 치렀다.

하지만 올해부터 문·이과생이 함께 수학 공통 과목 시험을 보고 ‘확률과 통계·기하·미적분 세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 치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과는 확률과 통계, 이과는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한다. 등급과 점수는 문·이과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통합해서 산출한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일반고 14곳, 자사고 2곳 등 서울 지역 16개 고등학교 3학년 4451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3월 학평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 가운데 88.5%가 미적분을, 5.5%는 기하를 선택해 이과생 비율이 사실상 94.0%에 달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 중 1등급을 받은 비율은 6.0%에 그쳤다.

수학 2등급의 83.4%, 3등급의 80.0%도 미적분·기하 선택 학생이 차지해 압도적인 이과 우위를 나타냈다.

5등급을 받은 학생 가운데 54.1%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과생 열세가 뚜렷했다.

교육계에서는 통합형 수능 시행에 따라 수학 성적이 대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른 만큼 문과생들의 고전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현경 기자 son89@

#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 시 가산세 부과 정당”

### 종근당고촌재단,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공익법인 직원이 임용 이후에 재단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놓이더라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종근당고촌재단이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법국세청은 2018년 고촌재단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시

행했다. 국세청은 당시 고촌재단 임원 A 씨가 설립(출연)자인 고(故) 이종근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단 출연자가 지배하는 그룹의 임원이 재단 공익법인의 임직원 지위를 함께 유지할 경우 특수관계를 인정한다.

서대문세무서는 같은 해 12월 고촌재단이 A 씨에게 지출한 직·간접 경비 합계

대한 1억9000만 원 상당의 가산세를 결정해 고지했다.

고촌재단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고촌재단은 “A 씨가 1994년 1월 임용 당시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면서 “임용 이후인 2002년 3월 15일에 종근당 계열사의 감사가 되면서 특수관계에 놓였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인 자가 임용 이후 특정 시점에 출연자와 특

수관계에 놓이게 되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면서 “A 씨가 종근당그룹 감사가 된 후에도 고촌재단의 임직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익 목적 사업에 온전히 사용돼야 할 금액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법의 목적이 있다”면서 “출연자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이 재단 공익법인의 임직원 직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은 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근당고촌재단은 1973년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종근당 창업주인 이 회장이 사재로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감사 초빙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에 의거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개발의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산업기술정책 수립과 기술혁신기반 강화를 통한 기술강국의 실현과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분을 비상임감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 공모직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감사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
  - 직 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감사 등(정관 제1조 참조)

- 자격요건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갖춘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해당 분야(감사 및 이에 관련되는 분야)의 업무 이해도를 갖춘 분
  -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을 갖춘 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 1부
  -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소정양식) ..... 1부
  - 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서(소정양식) ..... 1부
  - 이해관계 유무 확인서(소정양식) ..... 1부
  - 지원서류에 대한 증빙자료(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실적자료 등) ..... 각 1부
  - ※ 소정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기간 등
  - 공고기간 : 2021. 4. 20.(화) ~ 4. 29.(목) 18:00까지
  - 제출기간 : 2021. 4. 23.(금) ~ 4. 29.(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 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한 제출 불가
  - 제출처 : (우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한국기술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F 임원추천위원회(기획조정실)

- 심사방법 및 향후일정
  -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5월중)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 ※ 평가요소(배점)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25),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25),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25), 기관특성상 요구되는 고유역량(25)
  -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5월말)
  - 비상임감사 임명(5월말 이후)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입증할 자격증, 경력(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관단체 등에 의한 추천이 가능하며, 2021.4.23(금)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추천을 통한 응모의 경우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간 등은 상기내용과 동일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반환하고,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비상임감사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기획조정실, ☎02-6009-3052)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iat.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20.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책을 읽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책 한 권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멍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단단한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당신에게 독서의 무대를 다시 열어보게 될 책은, 깊이 있는 읽기도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한다.

이정호 지음 / 320쪽 / 4600원 (값15,000원)



# “까치온 덕에 밖에서도 통신비 걱정 없이 와이파이”

서울시 공공 무료 와이파이 2022년까지 시 전역으로 확대  
LTE보다 10배 이상 빨라... 정보소외계층 통신격차 해소  
통합 관리센터 구축·관리체계 일원화로 서비스 품질 개선

“통신요금 때문에 밖에서 데이터 사용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까치온 덕분에 자유롭게 사용해요.”

14일 성동구 송정제방길에서 만난 김미(59) 씨는 “매달 나가는 통신비 부담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2년까지 서울 전역 설치 완료=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4배 빠른 속도의 새로운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성동·구로·은평·강서·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까치온은 서울을 상징하는 새이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인 ‘까치’와 와이파이가 켜진다는 뜻의 ‘온(On)’이 결합된 이름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온(on)택트’의 의미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나머지 20개 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2022년 까치온 서비스가 서울 전역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한 마음을 날려버리러 송정제방길에 자주 나온다”며 “걷기 운동을 하면서 까치온으로 음악도 듣고 컴퓨터에서 유튜브도 보고 정말 좋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요금 걱정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지인들에게 까치온을 알리고 있다”며 홍보대사도 자처했다.

이날 송정제방길에서 측정한 까치온의 다운로드 속도는 403Mbps로 LTE 29.3Mbps의 10배 이상이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의 만족도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를 하나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2011년부터 여러 기관에서 개별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50여 개 SSID를 사용했다.

이를 하나로 통일해 이동할 때마다 접속 버튼을 눌러야 하거나 서비스가 끊기는 등의 문제를 해소했다.

일반접속은 ‘SEOUL’, 보안접속은 ‘SEOUL\_Secure’로 일원화했다. 보안접

까치온 핫플(hot place) 조성 계획		※출처: 서울시	
구분	개선사항	AP대수	
		기존	개선후
세종대로 사람숲길	신규 20대, 교체 2대, 철거 1대	14	33
서울로 7017	설치위치 조정 23대, 교체 4대	27	27
덕수궁 돌담길	신규 6대	4	10
5대강(경복궁, 경희궁, 창경궁, 덕수궁, 창덕궁) 및 종묘	신규 5대, 교체 22대, 철거 2대	24	27
남대문시장	교체 11대, 철거 2대	13	11
남산골 한옥마을	신규 18대	-	18
직영 공원 (천호공원, 건대메공원, 하늘공원, 올림픽공원(몽촌토성))	신규 14대	7	21
한강 공원 (이촌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신규 2대, 교체 6대, 브릿지 보강 6대	29	31
합계		118개	178개

속은 SEOUL\_Secure로 처음 한 번만 접속하면 그다음부터는 까치온이 설치된 모든 장소에서 자동으로 와이파이 연결된다. 보안접속 ID와 비밀번호는 모두 seoul이다.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 이날 성동구청에인생생활화관에서 만난 이주은(52) 씨는 “회관 내에서도 컴퓨터를 안 쓰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며 “예전에는 용량이 큰 영상 등은 전송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까치온으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씨는 “정보소외계층이 무료로 와이파

이를 이용해 디지털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한 번만 로그인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해 요금제 걱정 하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하다”고 전했다. 그는 “가끔씩 속도가 느려지거나 내부 공유기로 넘어갈 때가 있다”는 불편함은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달에 공공와이파이 통합센터를 열 예정이다. 관에서(자치구, 사업소) 개별적으로 구축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를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자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증과정을 간편화하고 민원창구를 일원화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며 미래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까치온 이용 현황도 분석해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자치구 내 주요도로, 전통시장과 공원, 하천, 산책로, 문화체육시설, 지하철 역사 주변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 설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복지관과 청소년쉼터, 도서관, 일자리 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한 서울의 실내 공공시설 1443곳에 까치온이 구축됐다.

다음달부터는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사람숲길, 덕수궁돌담길 등 서울 대표 관광 명소와 공원 17곳을 ‘까치온 핫플레이스’로 조성한다.

시민들은 스마트서울맵에서 서울 전역의 까치온을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까치온 QR코드나 URL로 모바일에 접속하면 1만여 개 이상 설치된 까치온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하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통신은 기본적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재”라며 “까치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의 발판이 돼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기본권을 보장해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 서울시, 외투 스타트업에 최대 5000만 원 지원

추가 고용인원 조건 완화로  
보조금 신청 가능 대상 확대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접수

스타트업 기업 성장과 글로벌 유니콘 육성을 창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서울시가 외국인투자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의 고용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보기술(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5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 고용 유지 외국인투자기업(외투 스타트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1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정 신성장동력 산업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 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기준인 추가 고용 인원 조건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했다.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때에도 ‘스타트업 등 신생 벤처기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 스타트업)은 5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과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을 돕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자치분권을 위하여” 오세훈(왼쪽 두 번째) 서울시장과 김인호(세 번째) 서울시의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서울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용객 늘며 새단장 꿈꾸는 가산디지털단지

금천구 ‘노후역사 개량사업’  
340억 투입 2023년 하반기 준공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사가 편리하고 넓은 공간으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역사의 전면적인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산디지털단지역사는 가산디지털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오전 5~10시) 지하철(1·9호선과 분당선) 역 중 가장 많은 사람이 하차하는 역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74년 건축 이후 47년이 경과한 탓에 건물에 균열, 누수, 도색분리가 발생하는 등 노후된 시설이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높은 유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신축역사 조감도.

지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가산디지털단지역사의 신축을 결정하고,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설계(안)를 확정했다.

총사업비는 340여억 원으로 국토교통부가 40%, 한국철도공사가 60%를 부담한다. 건축방법은 먼저 신축역사 1개동을 기존 역사 옆에 신축하고, 이후 기존역사를

철거한 자리에 추가 신축해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축역사는 대합실면적이 0.42㎡/인에서 1.29㎡/인 규모로 확대된다.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승객서비스 공간도 확대된다.

출입구도 지상역사를 경유하지 않고 승강장에서 바로 지상으로 연결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신축역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최근 국토부의 3080+ 주택공급방안 선도 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가산동이 선정된 것과 더불어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신축되면 가산동 주거환경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금천구민의 생활여건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진출 돕는다

구로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

서울 구로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다.

구로구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소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다각화를 위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23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구로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이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기업도 포함된다. 판매 상품이 연관돼 있거나 비슷한 경우 2개 이상 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신청해도 된다.

구로구는 최대 5개 기업을 선발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준비부터 실제 영업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5개 제품까지 사진 촬영과 판매 페이지 제작을 도와준다. 또 스마트스토어 운영 매뉴얼, 고객관리, 정산 등에 대한 기본교육과 마케팅 전문업체 컨설팅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제품 소개서 등의 서류를 갖춰 23일 오후 5시까지 구청 일자리지원과 이메일(bandibool@guro.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업 성장성, 온라인 판매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달 30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두리하나 다울(제과류)’ ‘스페이스 함께(공간정리 컨설팅)’ 등 4개 기업이 구의 지원을 받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했으며, 현재도 판매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 위험은 나누고 자산은 더하라

낮에는 국내주식, 밤에는 해외주식, 틈틈이 가상화폐까지. 불확실성의 시대에 투자자들은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걸까'에 불안한 포모증후군(Fear Of Missing Out, FOMO)에 시달리고 있다. 연일 뉴스에선 부동산, 코스피지수, 비트코인의 신고가 경신 소식이 나오지만, 무엇을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에서 길 잃은 초보 투자자들이 대다수다. 올해 주식시장에 뛰어들 '동학개미'라면,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저금리 기조에 가파른 자산가격 상승을 겪은 터라 '뭉든 사야 한다'라는 조급함만 남아있다. 4월 들어 코스피지수 3200, 코스닥지수는 1000을 가뿐히 돌파했지만, 개인투자자가 집중적으로 사들인 대형주 수익률은 지수 대비 지저분한 상태다.

유튜브, 텔레그램 등 정보의 홍수도 개인투자자의 재테크

기준 정립을 어렵게 만든다. 테마주, 우선주 등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가 쏟아지지만, 폭등하는 종목을 쫓다간 높은 확률로 손실에 이르게 된다. 투자가 어려워 전문가를 찾으려고 해도, 역시 쉽지 않다. 이들을 노리는 주식 리딩방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불나방 매매' 대신 증권사들이 내놓은 다양한 주머니로 위험을 분산해 보는 건 어떨까? 최근 증권사들은 다양한 자산을 적정한 시기에 맞춰 적정 자산을 배분해 투자하도록, 동학개미를 위한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절세혜택, 전 세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도 제공한다. 수많은 금융상품 중 어떤 상품이 내 주머니를 볼릴 수 있을지, 버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원칙을 상기해야 한다.

이인아 기자 ljh@

## 성장 잠재력 큰 메가 테마에 폭넓게 투자

### 미래에셋증권

#### Global X ETF랩

미래에셋증권은 초저금리 시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하는 마니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에 주목할 랩 계약으로 'Global X ETF랩'을 꼽았다.

'Global X ETF랩'은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되는 계약으로서 현재 누적 잔고 1300억 원이 넘는 미래에셋증권의 대표 테마형 ETF랩 계약이다. 특히 클린에너지, 클라우드, 디지털헬스케어, 게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메가 테마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며 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lobal X ETF랩'은 올해 들어 270억 원 이상의 잔고가 유입되면서 현재 잔고는 1300억 원(2021년 3월 5일 기준)을 넘어섰다.

'Global X ETF랩'의 가입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며 중도입출금과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며 미래에셋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원화와 외화로도 가입할 수 있다.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 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



해 상품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혁신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Global X China Disruption ETF (KEJI)가 최근 상장했는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인 Global X 상품임에도 검증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ARK Investment의 ETF 역시, 고령의 CIO리스크와 함께 운용 중인 개별 ETF상의 보유 종목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미래에셋증권의 상품 검증 프로세스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가 급변 시 유동성 문제로 보유 종목 매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중소형 종목에 과도하게 높은 지분율이 추후 헤지펀드 공매도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뉴딜 대형주 중심 투자 안정성 'UP'

### 하나금융투자

#### 하나 뉴딜글로벌테크랩 V4

"전세계가 주목하는 뉴딜의 물결에 합류하라."

하나금융투자는 전세제로 확산하고 있는 뉴딜 트렌드에 맞춰 수혜가 예상되는 글로벌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하나 뉴딜글로벌테크랩 V4'를 추천했다.

세계 각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그린'과 '디지털 전환'을 양대 축으로 한 뉴딜 정책을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으로 보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나 뉴딜글로벌테크랩 V4'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거재소에 상장된 그린 뉴딜과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들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한다. 뉴딜 관련 국내 투자에 집중된 '하나 뉴딜금융테크랩 V3'의 확장 버전으로 미국과 중국 등 지역 분산과 대형주 위주의 투자로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금융투자 랩운용실이 리서치센터와 협업해 각종 분석을 받아 종목을 선정하고 운용한다.

권장진 하나금융투자 랩운용실장은 "우리는 뉴딜 정책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이미 세계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를 통해 보고 경험하고 있다"며 "하나금융투자는 손님들이 뉴딜정책의 수혜를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나 뉴딜글로벌테크랩 V4'를 마련했다"고 출시 소감을 밝혔다.



'하나 뉴딜글로벌테크랩 V4'는 선취형과 성과형으로 나뉜다. 최저 가입 한도는 3000만 원이며, 500만 원이 넘는 선에서 추가 입출금이 가능하다. 일부 출금도 가능하지만, 최저가입금액을 웃돌아야 한다. 수수료는 선취형의 경우 1.0%에 후취로 연 1.5%가 부과되고, 성과형은 후취로 연 1.5%에 손님과 별도 합의로 정하는 성과수수료가 부과된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만기 해지를 하지 않으면 연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된다. 1년 이내 중도해지도 가능하지만, 선취형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해지는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후 가능하며, 해외주식 매도 때 국가별 결제일이 달라 출금 가능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채권자산 비중 조절 통해 변동성 대응

### 한국투자증권

#### 한국투자글로벌플렉스펀드

최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글로벌 금리가 0%대를 나타내면서 전통적인 채권의 투자 매력도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채권시장 환경에서는 하나의 자산에만 투자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환경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내는 채권 자산군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정한 섹터에만 투자하는 펀드보다 유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움직일 수 있는 플렉서블(flexible)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한국투자글로벌플렉스펀드'는 플렉서블 전략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채권펀드다. 선진국 국채부터 하이일드, 전환사채 등 다양한 채권자산의 비중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한다. 별도의 벤치마크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데 쉽다.

한국투자글로벌플렉스펀드는 재간접형 펀드로 노무라글로벌다이나믹채권펀드(GDBF)에 80~100% 범위에서 투자한다.



GDBF는 복잡한 헤지펀드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채권자산의 비중조절만으로 다른 플렉서블 채권 펀드에 비해서도 낮은 변동성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GDBF의 설정액 규모는 작년 말 기준 30억 달러다.

한국투자글로벌플렉스펀드는 GDBF에 투자하면 서도 국내 투자자에게 맞춰 변동성 관리 및 환헤지 전략을 추구한다.

채권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GDBF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

환헤지 비용이 커지거나 환율 변동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거래시점 또는 환헤지 비율을 조정해 환위험을 관리한다.

## 홍콩달러 가치 하락해도 환차손 걱정 無

### 삼성증권

#### 홍콩H지수 추종 ETN 4종

삼성증권은 홍콩H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 4종을 신규로 출시했다.

삼성증권이 신규 상장한 ETN 4종은 '삼성 HSCEI ETN(H)', '삼성 인버스 HSCEI ETN(H)', '삼성 레버리지 HSCEI ETN(H)', '삼성 인버스 2X HSCEI ETN(H)'이다.

기초자산인 홍콩H지수는 파생결합증권(ELS)의 기초지수로 널리 쓰여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지수로, 이번 ETN 상장으로 투자자들은 홍콩H지수의 방향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신규 ETN은 홍콩H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1배/2배 또는 -1배/-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또한 신규상장된 4종의 ETN은 모두 환 헤지 상품으로, 원화 대비 홍콩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의 환차손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3월 말 기준 홍콩H지수를 구성하는 비중 상위 5개 종목은 텐센트(9.4%), 건설은행(8.6%), 중국평안보험(6.7%), 샤오미(5.1%), 공상은행(5.0%) 순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중국 주식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과 한정된 정보 등의 문



제로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홍콩H지수 추종 ETN 4종은 2024년 3월 20일까지 거래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홍콩H지수 추종 ETN 외에, 지난 12월에는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하는 ETN을 발행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지수를 활용한 ETN으로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레버리지 ETP를 거래할 경우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매수가 가능하다.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접속 후 '이러닝' 중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Guide'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을 수강하면 '레버리지 ETP 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 통장 하나로 금융상품 다 담고 비과세 혜택까지

### NH투자증권

####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NH투자증권은 고객이 직접 주식과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개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지난달에 증권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출시와 함께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완전무료 이벤트 등 경쟁사 대비 혜택이 가장 큰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의 가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중개형 ISA 강자임을 입증하고 있다.

ISA는 2016년 3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하나로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이다. 통장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자와 배당,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

또한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고,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로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고객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중개형 ISA의 가장 큰 특징

이다. 한편, 중개형 ISA에서 개별 종목을 거래하면 주가 상승 때 수익과 함께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금액을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익 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계좌와 비교 때 절세관점에서 유리하다.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출시하는 중개형 ISA를 기념해 투자자들의 목돈 만들기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제수수료까지 받지 않는 매매수수료 완전무료(가입 시점 기준 1년간)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가입자와 함께 은행 등 타 금융사에서 NH투



자증권 중개형 ISA로 이전하면 이전일로부터 1년간 완전무료가 적용된다.

NH투자증권은 중개형 ISA의 원활한 고객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전담조직을 중개형 ISA 오픈 일정에 맞춰 운영한다. ISA 전담조직 고객응대 채널은 고객지원센터로 연결해 기존보다 빠른 상담 연결이 지원된다.

##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매매까지 원스톱

### KB증권

#### KB 에이블 어카운트 지점운용형

일임형 랩 어카운트(Wrap Account)는 고객이 일임한 자산에 대해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부터 매매 실행 및 리밸런싱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

KB증권의 대표적 일임형 랩 어카운트(Wrap Account) 'KB 에이블 어카운트(KB able Account)'는 본사운용형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최근 개인별 투자 성향에 따른 맞춤 구성이 자유로운 지점운용형을 출시해 자산관리의 핵심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KB 에이블 어카운트 지점운용형(EasyFolio) (이하 'EasyFolio')은 지점운용형 랩 서비스로 'Easy'와 'Portfolio'를 합성한 서비스명처럼 같은 기대수익률 아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장점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준비했다.

'이지폴리오(EasyFolio)'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본사운용 포트폴리오와 지점운용 포트폴리오로 구성되며 고객 성향과 시장 상황, 고객별 요청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비중에 맞춰 운용된다.



본사운용 포트폴리오는 KB증권의 글로벌자산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본사운용자가 운용하고, 지점운용 포트폴리오는 고객별 투자목적,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 국내외 주식(ETF포함), 수익증권, 채권 및 파생결합증권 등의 다양한 자산을 지점운용자가 운용한다.

김유성 투자솔루션센터장은 "이지폴리오는 저금리 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고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지폴리오를 통해 고객 자산의 안정적 증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지폴리오'의 최저가입금액은 1000만 원이며 수수료는 운용포트폴리오별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 매월 자산 리밸런싱·해지 수수료 없어

### 메리츠증권

#### 메리츠펀드마스터Wrap(랩)

메리츠증권이 국내, 해외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메리츠펀드마스터Wrap(랩)'을 판매 중이다. '메리츠펀드마스터랩'은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펀드를, 언제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직접 펀드를 고르고 운용하는 랩어카운트다.

'메리츠펀드마스터랩'은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와 상품부서가 협업해 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경기와 시장전망에 따라 투자 유망한 자산과 국가 등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또 펀드 전문가들이 운용성과와 철학이 우수한 펀드를 선정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매월 자산배분전략 회의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산의 리밸런싱을 실시하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 상황에 대응한다.

특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는 이경수 센터장이 부임한 2016년 이후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평가에 5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된 이력도 보유하고 있다.

최소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며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나 중도해지가 가능



하다. 해지 시 별도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또한 매 분기 운용보고서를 통해 현재 운용상태와 향후 운용 전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고수익 지향형 이상의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추천했다. 투자일임 수수료는 연 1.5%로, 예탁자산 평가액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분기 단위(1, 4, 7, 10월)로 징수한다. 투자금 일부를 출금하거나 중도 해지하면 편입된 펀드 중 환매일이 가장 낮은 펀드의 환매일에 지급된다. 펀드는 청산해지만 가능하며 현물 해지는 불가능하다. 가입과 문의는 메리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통해 가능하며 가입 후 홈페이지, HTS, MTS에서도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 S&P500 ESG지수 기초자산으로 투자

### 신한금융투자

#### ESG ELS

신한금융투자는 3월 업계 최초로 ESG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출시했다.

ELS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갖춘 상품으로 재테크 상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기초자산과 수익구조로 맞춤형 투자상품이 될 수 있는 ELS는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도 하게 하는 상품이다.

신한금융투자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투자로도 각광받고 있는 ESG 관련 ELS를 출시한 배경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 회사의 지속가능성 및 성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출시한 ESG ELS는 업계 최초로 S&P500 ESG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S&P500 ESG지수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유가증권의 성과를 측정하는 동시에 S&P 500과 유사한 전체 산업군 비중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광범위한 시장 점유율 지수다. 이에 S&P 500 ESG 지수는 ESG 특성을 개선하면서 S&P 500과 유사한 리스크 및 수익률을 제공한다.



S&P500 ESG지수는 S&P500 구성 종목 중 S&P DJI ESG Scores를 기준으로 295개의 종목을 선정해 구성한 지수이다. ESG 점수 순으로 S&P 500 내 각 GICS® 산업 그룹의 변동 시가총액의 75% 수준까지 종목을 구성한다.

특히 신한금융투자 ELS는 과거 뛰어난 수익 상황 능력을 보였다.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9년간 자사장구를 통해 판매 후 상황 확정된 지수형 노낙인(No-Knock in) (이하 생략) 공모 ELS(주가지수 연계증권) (이하 생략) 2736건 전수를 분석한 결과 100% 전부 이익 상황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판매된 금액은 4조9600억 원 규모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러한 과거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노낙인 구조로 ESG 관련 상품을 설계했다.

## 글로벌 리츠 투자 안정적 자산관리 추구

### 대신증권

####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펀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체 투자처로 리츠 자산이 주목받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꾸준한 배당수익이 매력적이고 경기에 민감한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구성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가에 상장된 리츠에 투자해 안정적인 배당수익과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펀드'를 선보이고 있다.

대신자산운용이 처음으로 출시하는 리츠 펀드로, 글로벌 주요국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리 민감도에 따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배당수익의 복리효과를 고려해 자산보유기간 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 또 가격 하락 리스크 등 변동성을 통제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추구한다.

이 상품은 자산의 가격과 추세, 거래량 등을 분석한 트레이딩 알고리즘과 다양한 해외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서치 역량을 활용해 양질의 리츠를 발굴한다. 주요 투자지역의 실물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지 시장 분석 능력으로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 종목을 선정



한다. 분산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진국 부동산 관련 리츠상장지수펀드(ETF)도 일부 편입해 운용한다.

또한 글로벌 리츠 투자 전문운용사인 러셀(Russell Investments)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부동산 투자 경력 총 50년 이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20년의 평균 경력연수를 보유한 150명 이상의 리서치팀으로 구성된 러셀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운용팀이 글로벌 리츠 시장 내 리츠 자산의 가격 괴리 현상을 추적하여 적절한 매수 타이밍 포착한다.

환노출형 및 환헤지형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탁보수는 연 0.76~1.36%이다. 환매수수료는 없으며, 상품가입 및 상담은 대신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애플리케이션(MTS)에서 가능하다. 운용은 대신자산운용이 담당한다.

하나금융그룹

# 복잡한 뉴딜투자 테크랩 시리즈로 끝내라!

하나금융투자 랩 상품이면 충분하니까!



## 뉴딜금융테크랩 V3

「삼성전자 + 금융주」와  
「한국판 뉴딜 수혜주」를 조합한 **중장기 수익 추구**

[하나 뉴딜금융테크랩V3] 랩 수수료

• 선취형: 선취 0.7%, 후취 연 1.0% • 기본형: 후취 연 1.2%

## 뉴딜글로벌테크랩 V4

「그린 &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해외주식에 집중 투자**

[하나 뉴딜글로벌테크랩V4] 랩 수수료

• 선취형: 선취 1.0%, 후취 연 1.5%  
• 성과형: 후취 연 1.5% + 성과보수(고객과 별도 합의)

\*V3, V4 주요 투자 테마 **그린 뉴딜** + **디지털 전환** (친환경차, 2차전지, 그린에너지 등 +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는 본 랩카운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랩카운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랩카운트는 고객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개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의하지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 증가회사 및 해외 거래소에 지불하는 비용이 고객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본 비용은 해당 거래소 및 증가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1472호(2021.03.24~2022.03.23) CC브랜드210326-0193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투자**

# “어디 봤더라? 내 소중한 것 지켜주는 디지털 꼬리표”

##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태그+’ 개발팀

초광대역 기술 탑재 cm 단위 정교한 위치정보 제공  
디즈니·네이버 라인 등과 협업 액세서리 출시 계획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에 이어 새로운 모바일 액세서리 전쟁이 시작됐다. 이른바 ‘태그 전쟁’이다. 삼성전자는 1월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선보였고, 애플은 ‘에어태그’를 준비하고 있다.



태그는 반려동물 관련 용품이나 가방, 열쇠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다. 한번 연결해 놓으면 모바일로 위치를 편리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준다.

삼성전자는 최근 UWB(초광대역·Ultra-Wide Band) 기술을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출시하며, 한층 정교한 위치 정보 제공에 나섰다. 물건이 있는 위치를 증강현실(AR)로 보여 실시간으로 찾아 나갈 수 있고, 센티미터(cm) 단위로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태그는 일반 물품이나 반려동물 외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류한준 프로는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는 여러 가지 이동형 장비가 있다. 이것들을 한 번 쓰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았을 경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자전거나 대형마트의 카드 등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물품들에 스마트태그를 활용하면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활용해 갤럭시 스마트태그가 부착된 물건의 위치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착된 물건 가까이 갈수록 BLE 신호가 점점 세지고, 초록색 원 그래프가 채워져 마치 보물찾기하는 듯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박지모 삼성전자 프로는 “신호가 가장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스마트싱스전략그룹 정진홍(왼쪽부터), 박지모, 장정우, 류한준, 현소라 프로가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 사진은 스마트태그 제품들. 사진제공 삼성전자 뉴스룸

세진 순간에는 ‘소리 울리기’ 아이콘을 선택해 스마트태그에서 소리가 울리게 하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들이 갤럭시 스마트태그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스마트태그를 감싸는 커버도 다양하게 출시했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 액세서리 담당 박서연 프로는 “현재 여러 브랜드와 협업하고 있으며 추후 디즈니, 스타워즈, 심슨, 네이버 라인 등과 협업한 액세서리들도 출시할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자전거, 키보드, 유모차 등 분실률이 높

은 기기에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도 있다. 박서연 프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스마트태그가 눈에 띄면 제거할 수도 있어서 리플렉터 등 안전용품 형태의 케이스도 만들었다. 이런 케이스는 케이블 타이를 내장해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류한준 프로는 “갤럭시 스마트태그가 마치 마법처럼 사용자들의 일상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는 제품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당연한 기기’로 발돋움할 갤럭시 스마트태그의 여정을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신한은행, AI사업 총괄 AICC 삼성 출신 김민수 센터장 영입



신한은행은 AI(인공지능) 사업을 총괄하는 AICC(통합AI센터) 센터장에 김민수 삼성 SDS AI선행연구소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민수 센터장은 1977년생으로 KAIST에서 데이터마이닝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삼성 SDS AI선행연구소 부사장으로 AI 기술 연구 및 관련 사업을 이끌어 왔다. 김 센터장은 제조, 의료, 물류,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딥러닝, 강화학습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사업화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자연어 처리 기반 텍스트 분석 개발, 딥러닝 기반 분류 모델 및 추천 모델 개발 등의 분야에 높은 이해도와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다. 김법곤 기자 nova@

## 라운시큐어·시스원·와이즈넷 3월 디지털뉴딜 우수사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라운시큐어, 시스원, 와이즈넷 등 3건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달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는 범부처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과 확산 도모를 위해 작년부터 시행했다. 3월에는 지능형 정부 구원을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공무원 서비스 개발한 사례와 공공서비스에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 대민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 사례 등 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라운시큐어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사업(과기정통부, 행안부)’에 참여해 현재까지 9개 부처 총 1995건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며 디지털 신분 인증체계로의 전환에 기여했다. 세종·서울을 시작으로, 과천·대전 지역 공무원에게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하고 향후 대국민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스원은 출입통제 시스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사업(과기정통부, 행안부)’에 참여하며 모바일 공무원증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연계(1만5000명 대상 21개동 3500개 NFC 설치)한 디지털 출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으로도 활용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와이즈넷은 ‘AI 바우처 지원사업(과기정통부)’에 참여하며 AI 챗봇 기술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95% 이상의 상담 성공률을 기록한 아라(병무청), 탠젤봇(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대국민 챗봇 서비스를 통해 공공행정의 품질 고도화에 기여하고, 국내 AI 생태계 제변을 확대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SSG 랜더스 유니폼 입을 정용진 부회장

# “내 직책은 응원단장”

### SNS 사진 올리고 야구팬과 소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SSG 랜더스 응원단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정 부회장은 18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SSG 랜더스 홈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올린 뒤 “헬러윈 의상이라는 이야기 듣고 좌절했다”고 썼다. 정 부회장은 유니폼 상·하의는 물론, 언더웨어와 양말, 야구화까지 착용했다.<사진>

이에 대해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가 댓글로 “지명타자입니까? 아니면 구원투수입니까?”라고 물었는데, 정 부회장은 이에 “응원단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부회장은 2월 야구단 인수를 마무리 지은 뒤 유니폼이 나오면 자신의 이름과 함께 편의점 이마트24를 상징하는 24번을 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부회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야구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15일엔 SSG 팬들에게 쓰레기를 줍는 ‘쾌관 플로깅 챌린지’ 동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 KT&G, 인력난 겪는 앞담배 농가 지원 이식작업 봉사

### 충북 제천시 백운면 농가 찾아

KT&G가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을 겪는 앞담배 농가를 돕기 위해 충북 제천 지역에서 앞담배 이식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에 참가한 KT&G 원료본부와 김천공장 임직원들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앞담배 농가를 방문해 약 1만㎡(약 3000평) 규모의 농지에서 이식 작업을 진행했다.<사진>

앞담배는 경작 특성상 밭에 씨앗을 뿌려 키우지 않고 육묘시설에서 모종을 길러 이식한다. KT&G는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고충을 겪는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고품질 앞담배 생산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2009년부터 13년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승호 KT&G 원료본부장은 “농촌 인



구감소와 고령화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KT&G는 매년 앞담배 이식과 수확 봉사를 진행해 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농가와와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한일시멘트 우덕재단, 올해도 230명에 장학금 지급

한일시멘트 우덕재단이 장학금을 수여하며 올해도 230여 명의 인재 육성에 나섰다.

한일시멘트 우덕재단은 16일 1차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덕재단은 매년 230명가량의 장학생

에게 졸업 때까지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1차로 신규 선발된 124명 중 대표로 9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2011년부터 3년간 장학 혜택을 받은 이은영 씨가 참석해 후배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이 씨는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기회가 온다”며 “우덕재단의 장학금 혜택으로 학비 부담 없이 열심히 공부해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덕재단은 한일시멘트 창업주인 우덕허재경 선대회장이 1983년 설립했다. 지금까지 우덕재단의 지원을 받은 장학생만 4894명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 인사

◆환경부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신진수 ◇국장급 전보 △물통합정책국장 김동규

◆중소벤처기업부 ◇부이사관 승진 △김봉덕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한국전력 ◇본부장급 △상생발전본부장 이경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박정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혁신본부장 김성아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 류광수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신임 △포트폴리오전략부 김범준

◆에너지경제신문 △편집국 건설부동산부장 직무대리 김지형

## PDF·포토샵 개발한 ‘어도비 창립자’ 찰스 게슈케 별세

어도비 창립자이자 PDF·포토샵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찰스 게슈케가 81세로 별세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어도비는 게슈케가 전날 거주 중이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산타누 나라엔 어도비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는 수십 년간 회사의 나침반이자 영웅이었다”며 “그의 별세는 어도비 커뮤니티와 IT 산업에 크나큰 손실”이라고 애도했다. 또 “그는 어도비 공동 창립자로서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혁명을 일으킨 획기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며 PDF와 아크로벳, 포토샵 등 게슈케의 유산들을 열거했다. 게슈케의 부인 낸시 게슈케 여사는 “남편은 항상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다”며 “유명한 사업가였고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지만, 그러한 성공에만 초점을 두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카네기멜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게슈케는 이후 제록스의 팰로앨토 연구센터에서 동료 존 워녹을 만난다. 이후 1982년 이 둘은 어도비를 설립하고 PDF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프로 등 다

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명성을 떨쳤다. 게슈케는 유명세로 인해 1992년 65만 달러(약 7억 원)의 몸값을 요구하는 인질범에게 납치됐다가 풀려나는 일을 겪기도 했다. 2009년에는 워녹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을 인정받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기술 메달을 받았다. 고대영 기자 kodae0@

## 부음

▲조남위 씨 별세, 조소연(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씨 부친상 = 19일,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 발인 21일, 02-2639-5282(상주 측에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일우(전 대구MBC 편집제작부장) 씨 별세, 남현재 씨 부친상 = 19일, 영남대 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21일 오전 8시, 053-620-4647

▲안승근(전 용인대 교수, 4·19 국가유공자) 씨 별세, 안태상·지현·지윤·지영 씨 부친상 = 19일,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1일, 02-2227-7541

▲정은수(전 삼성전자 근무) 씨 별세, 김연금 씨 남편상, 정해성(JTBC 보도국 정치팀 기자)·해인 씨 부친상, 이현지(에이피알 해외사업본부 이사) 씨 시부상 =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1일 오전 11시, 02-2227-7500

홍준욱의 머니무브



EAR리서치 대표

‘레버리지 투자’ 해도 되는 자산, 안되는 자산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지난 21년 동안의 코스피 성과를 살펴보면 무려 8번이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중 1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만 세 차례에 달한다. 즉 한국 주식은 대단히 변동성이 크고, 특히 마이너스 수익의 가능성이 높기에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의 패닉 사태 때를 돌이켜 보면, 왜 그렇게 주가가 급락했는지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기업실적 악화에 대한 공포,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주식 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 주원인임에 분명하지만 레버리지 투자자의 청산 이슈도 심각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레버리지 투자란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어떤 투자자 A가 원금 1000만 원에 4000만 원을 빌려 총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일 주식 가격이 20% 오르는 경우 A의 투자 성과는 무려 100%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원금 1000만 원에 빌린 돈 4000만 원을 합쳐 총 5000만 원을 투자했으니 그의 수익금은 1000만 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조금만 성과가 나더라도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주가가 빠지는 경우에는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투자자 A가 보유한 종목이 단 20%만 하락해도 원금 1000만 원을 모두 날려버리게 된다. 그리고 아마 그는 자신의 손실을 복구할 기회조차 잃어버릴지 모른다. 왜냐하면 A에게 돈을 빌려준 금

융기관으로부터 반대매매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담보 부족’ 위험에 처한 이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얼마 전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던 한국계 큰손 빌 황이 이를 만에 22조 원을 날려버린 것이 바로 반대매매 때문이었다. 참고로 미국은 개인투자자가 신용으로 빌린 돈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헤지펀드 및 패밀리하우스 등은 이런 규제의 밖에 있었기에 빌 황은 5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순간,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시장가로 처분하기에 급격한 주가하락이 촉발된다.

지난해 3월 주식시장이 연쇄적으로 폭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매매가 출현하면서 차례대로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하락이 새로운 반대매매를 촉발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투자 시에, 특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때에는 신용융자 잔고 및 반대매매의 추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꼭 금융투자협회에 가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한번만 검색해 보아도 손실

계 반대매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 지표는 이자율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의 신용융자 대출금리는 10% 전후에 이르는 만큼 매년 10%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자. 투자자 A가 투자원금 1000만 원에 대출 받은 돈 4000만 원을 합쳐 연 15%의 수익을 내는 종목에 투자했다면 그의 투자 성과는 75%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 10%를 적용하면 그는 4000만 원의 차입금에 대해 4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따라서 그의 투자성과는 75%가 아니라 35%로 떨어진다. 더 나아가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입을 때에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한다. 이자율이 0%였을 때에는 20%의 주가하락을 경험해야 반대매매의 위험에 처했지만, 이자율이 10%일 때에는 단 12%의 손실만 입더라도 청산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주식시장의 하락 국면이 시장이자율의 급등, 그리고 정책 당국의 레버리지 규제 강화에서 촉발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레버리지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독자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

다. 지난 21년 동안의 코스피 성과를 살펴보면 무려 8번이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중 1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만 세 차례에 달한다. 즉 한국 주식은 대단히 변동성이 크고, 특히 마이너스 수익의 가능성이 높기에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 한국의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 덜 위험하다. 2000년 이후 서울 아파트의 수익률은 연 평균 5.9%에 달하는 반면,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한 것은 단 네 차례에 불과했다. 특히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2013년에도 단 3.8% 하락에 그쳤다. 물론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투자자들처럼 ‘영끌’하면 청산의 위험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강한 편에 속하기에, 규제 범위 내에서의 레버리지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한국 주식시장은 매우 변동성이 크기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대매매가 급격히 확대되고 이자율마저 상승할 때에는 자신의 투자 포지션이 안전하지를 점검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정책발언대



박양숙 국민연금공단 복지상임이사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동네 보통사람

이투데이, 말투데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헤파이스토스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자.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두 번씩이나 버림을 받고 장애인이 됐다. 독자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야금술 장인이 된 헤파이스토스의 비범함에 감탄하면서 연민도 느낄 수 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딱한 사정도 사정이지만 장애인이란 점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장애에 대한 편견은 절기다. 몇 년 전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을 지역주민이 반대해 장애인 부모가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여전히 이웃에서 먼 외곽에 많다. 장애를 보는 우리의 인식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대비되는 사람을 ‘비’ 장애인이라고 부른다. ‘非(아닐 비)’가 아니라 ‘예비 장애인’이라는 의미의 ‘備(갖출 비)’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이동에 다소 불편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기보다는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장애인이 가진 ‘차이’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는 어떠한 노력과 배려를 해왔을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산업화 시기에야 비로소 제도화되고 확대되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등록 제도가 만들어졌다. 장애인등록제도는 장

애등급제를 기반으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6등급으로 구분하고는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제도였다. 장애등급제는 복지서비스의 제공기준으로서 장애인복지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애인의 개인별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제도로는 한계도 있었다.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확대였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2019년에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그간의 장애등급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했다. 먼저, 반인권적 용어인 ‘장애등급’을 없애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 정도를 구분했다. 또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의학적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개별 욕구와 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급여를 받을 수 있

게 됐다. 현재는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와 장애인주차표지,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지원 서비스에 종합조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30여년간 국민연금(장애연금) 사업 수행으로 축적한 장애인지원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뒷받침하였다. 개편된 제도에서도 핵심인 장애정도 심사업무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등급만 의학적 심사하던 과거와 달리 장애인복지에서 차지하는 공단의 역할이 훨씬 커졌다. 우리 사회의 어느 조직보다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고도의 장애 감수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갖춰야 한다. 41주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인을 ‘우리 동네 보통사람’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김정흠(金貞欽) 명언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경향이 많은데, 미래 사회를 내다보는 안목을 기르고 긍정적 미래관을 가질 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1세대 물리학자이자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선 과학자. 한국이론물리학회 창립을 주도한 그는 원자핵 구조와 핵반응기구 연구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다. 대표작 ‘미래의 세계’ 외 40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27~2005.

☆ 고사성어 / 견견포요(健犬吠堯) 중국의 견주(桀)같이 포박한 인간이 기르는 개가 요(堯)와 같은 성군(聖君)을 보고도 짖어댄다는 말이다. 개는 주인만을 알아볼 뿐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정을 두지 않는다는 뜻. 원전은 사기(史記) 회음후전(淮陰侯傳). “도적(盜跖)의 개가 요 임금을 보고 짖는다[跖之狗吠堯].” 인간도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한다는 말로 쓴다.

☆ 시사상식 / 업사이클링(up-cycling) 재활용(Recycling)과 더하다(Up-grade)의 합성어. 쓸모없어진 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안 입는 셔츠를 지갑으로 만들어 들고 다니면 환경보호도 되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을 소유할 수 있다.

☆ 유머 / 좀 더 참을걸 택시에 술 취한 손님이 타자마자 계속 코를 풀었다. 한참을 참던 기사가 ‘손님, 이제 그만 푸시죠!’라고 한마디 하자 그제야 그쳤다. 손님이 내린 뒤 치우려고 보니 코 묻은 만 원짜리가 19장이나 있었다. 기사의 혼잣말. “가만 있으면 50만 원도 넘었을 텐데..”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매년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는 것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총을 소집해 찬반 의견을 받는 것 역시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일은 할 수 없다. 드라마에서 보면 회사에 중대한 일이 생기면 ‘긴급 이사회 열어라’며 급박한 모습을 보인다. 이사회 역시 결국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다. 고객을 상대하는 기업일 경우 고객을 위하다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령 100만 원짜리 상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기로 했다면 고객에게 좋은 일이지만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수준이라면 주주에게 악재다. 물론 주주의 반발을 불러오는 결정은 애초

에 이사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적다. 최근 주주와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일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의 ‘사모펀드 반환’ 문제다.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4327억 원으로 2019년 NH투자증

권의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다. 1년 간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100% 보상안’을 수용하라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이 고객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기자수첩



손엄지 자본시장부/eom@

주주 vs 고객, NH투자증권의 고민

에 대해 NH투자증권 주주들은 금감원의 100% 보상 권고안을 이사회가 수용할 경우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은 “하나은행과 예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다면 이사회 배임”이라면서 “주식회사의 최고의 가치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고 말했다. 주주와 고객.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뒤야 한다.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들이 원하는 진심이 뉘지, 어떤 걸 더 감내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고 솔직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돈 많고, 예쁜 외모에, 마음씨가 착한 배우자만 고집하려 한다면 혼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Non-sell, Capital Market, etc.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씨티은행이 깬 '금융허브 꿈'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인 '동북아 금융허브'가 멀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는 16위로 홍콩(3위)과 싱가포르(4위)와 도쿄(6위)보다도 한참 뒤떨어진다. 2015년 세계 6위를 기록했지만, 6년 새 10계단이나 하락했다. GFCI는 영국계 컨설팅 그룹 지엔(Z/Yen)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으로 주관해 매년 3·9월에 산출하며, 비즈니스 환경·금융산업 발전·인프라·인적자원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지수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수립 당시 한국을 홍콩과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목표 달성 시기는 2020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밑그림을 그린 물류 주축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구상을 금융 허브로 진화시킨 게 목표였다.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융산업이 지금도 심각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푸는 단초에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로드맵대로라면 지난해 한국은 '아시아 3대 금융허브'의 원년이 됐어야 했지만 여전히 달을 수 없는 꿈이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아시아의 금융허브 홍콩이 흔들렸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을 떠나려는 금융기관과 인재의 행보가 이슈가 됐다. 그러나 정부는 조용했다. 일본과 싱가포르,

## 데스크칼럼

안철우  
금융부장



대만 등이 타깃이 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사무실 무상임대, 세제 혜택 등을 집중 홍보할 때 우리 정부는 명함조차 내밀지 않았다. 단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우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법인세 소득세가 높고 노동시장도 경직돼 있다"면서도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개편엔 한계가 있다"는 한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금융허브를 위한 환경 개선은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와 뿌리는 같지만 금융산업을 해석하는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심의한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년)'은 해외 금융사의 한국 유치 대신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무현 정부는 해외 금융사를 유치해 금융산업의 메카로 만들자던 계획이었는데, 정책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대표 은행인 씨티은행이 한국 진출 17년 만에 소매금융에서 철수기로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씨티그룹은 부진한 사

업을 정리해 수익성을 끌어올리고자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철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배당 간섭과 각종 금융 지원 차출 등 한국 특유의 관치금융 문화도 철수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연례 행사처럼 해외 본사로 배당을 할 경우에는 국부 유출 논란도 불거졌다. 더욱이 올해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를 이유로 직접 배당 성향을 20%로 제한한 상황이라서 부담은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은 권고에 딱 맞춰 배당 성향을 20%로 결정했다.

이런 환경 탓에 씨티은행처럼 한 회사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2017년에는 골드만삭스와 RBS, BBVA가 한국 땅을 떠났고, 2018년엔 UBS가 한국 땅을 떠났다. 2019년엔 맥쿼리은행이 한국에 등을 돌렸다. 동북아 금융허브는 뒷전으로 밀리고, 결국엔 외국계 금융회사의 '엑소더스'(대탈출)만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글로벌 금융사들의 철수는 국내 금융사의 선진 금융기법 습득 기회가 줄어들고,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대형 은행인 HSBC는 국내 소매금융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7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거취 문제도 복잡했다. 정부는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유야 어떻든 GFCI 순위가 6년 새 10계단이나 추락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의 한국 시장 철수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예사롭게 흘러버려서는 안 된다. acw@

## 시설

### 규제 못버틴 제조업 투자·일자리 해외유출 급증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를 크게 웃돌고, 이에 따른 일자리의 해외 유출도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제조업 ODI와 FDI 통계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효과를 추정한 결과다. 지난해에만 제조업 일자리 7만2000개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 일자리만 국내에서 잡았어도 작년 실업률은 4.0%에서 3.7%로 낮아졌을 것으로 환경연은 분석했다.

지난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10년간 국내 제조업의 ODI는 연평균 12조4000억 원이었고 FDI는 4조9000억 원에 그쳤다. 직접투자 순유출액이 연간 7조5000억 원으로, 이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간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000개에 달했다는 것이다.

직접투자 순유출액은 특히 지난 3년간 급증했다. ODI 통계는 2018년 18조2000억 원, 2019년 21조7000억 원, 2020년 14조 원에 이른 반면, FDI는 같은 기간 7조8000억 원, 5조7000억 원, 2조4000억 원으로 줄었다. 일자리 유출도 급격히 늘어났다. 2018년 직접투자 수지 -10조4000억 원에 일자리 유출 6만5000명, 2019년은 -16조 원에 9만9000명, 2020년 -11조6000억 원에 7만2000명이었다. 작년 ODI가 반도체(2조6000억 원), 전기장비(2조3000억 원), 자동차(2조2000억 원) 순으로 많았지만

FDI는 크게 저조했다. 직접투자 적자가 커지면서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전기장비 1만5500명, 자동차 1만4500명, 식료품 9300명 등으로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ODI는 시장 개척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생산설비 신증설 투자가 대부분이다. 우리 경제의 확장을 의미한다. 문제는 ODI만 급격히 늘어나고 FDI가 쪼그라들어 팽창은 일자리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고용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규제와 노동시장 환경 악화의 이유가 가장 크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으로 일관했고, 국회 또한 기업들을 옹호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을 남발했다. 수도 없는 규제의 사례는 거론조차 힘들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후진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정부 규제나 노동시장 경직성 등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막는다.

기업들의 투자가 멈추면 일자리도 생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해외 직접투자만 늘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데 그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지고 성장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심각한 고용위기를 세금 일자리로 계속 막을 수도 없다.

## 노트북을 열며



유현희  
유통바이오부 부장대우

### 스타벅스 문 닫으면 상권 살아날까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최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률은 역대 정권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규제에 또 다른 규제를 더할수록 시장의 반발은 더 거셌다.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은 절망했고, '코로나 블루'보다 무서운 '부동산 블루'에 우울증마저 호소하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5년 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집을 팔고 좀 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에 전세로 갈아탄 지인이 있다. 그는 당장 2년 뒤가 막막하다. 지금의 전세금으로는 인근 지역으로 이주가 어려울 만큼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평수를 좁혀도 외곽지역으로밖에 이주할 수 없다며 망연자실했다.

규제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은 명백한 실패다. 그러나 정부 규제는 멈출 줄 모른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의 규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식자재마트와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도입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올세권(올리브영 상권)', '스세권(스타벅스 상권)'이 사라지게 하는 지역상권법 발의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특히 식당과 주점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영세 식당이나 소규모 주점의 경우 하루 매출로 다음 날 장사할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자재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면 하루 벌여 하루 식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이들은 그 하루 동안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식자재마트에서 한 번에 단시간에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을 시장을 돌며 야채, 생선, 육류 등을 별도로 구매하는 번거로움과 구매 시간이 늘어나는 식당 주인들의 부담을 이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복합쇼핑몰도 마찬가지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의 70~80%는 자영업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규제를 가한다지만 실제 규제 시름하는 것은 입점 자영업자들이다. 의무휴업이 도입돼 월 매출이 감소한다 해도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는 줄어들지 않는다.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이들의 임대료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상권법도 다르지 않다. 지역상권의 동의 없이는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다이소 등 대기업 운영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 이 법의 실효성은 물론 적

지 않은 부작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지역상권법은 상업지역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 도소매 점포가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규모 점포와 가맹본부의 직영점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상권법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 대상이 되는 점포에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스세권'과 '올세권'은 창업전문가와 상권전문가들이 짚는 최고의 상권 중 하나다. 스타벅스와 올리브영이 입점하는 상권은 성공한다는 속설까지 있을 정도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장은 "자영업자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인근을 주목하는 이유는 유통인구가 늘고 유속(유통인구의 이동 속도)이 느려지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한 상권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해당 상권에서 소비가 늘고 상권이 활성화된다. 이는 인근 상권 입점 자영업자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과 식자재마트에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스타벅스와 올리브영의 입점을 막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도. yhh1209@

## 특어, 특!

### 백신 특허와 강제실시권

글로벌 리더 175명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이 특허권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긴급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세계 각국에 코로나19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미국과 유럽의 자국우선원칙에 밀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분배된 7억 도스 중 저소득국가에 돌아간 비율은 0.2%에 불과한데 그 내막을 보면 결국 돈이다.

백신 공급 문제는 결국 생산량의 부족이고, 그 이유는 개별회사가 특허로 울타리를 치고 위탁생산계약을 맺은 소수의 회사에만 생산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위탁생산계약을 정해진 양만 생산할 수 있을 뿐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계약을 맺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공급량도 결정할 수가 없다. 다행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기술이전 계약도 맺었고 계약내용에 특허에 대한 실시권도 포함되므로, 노바백스 백신은 생산능력 범위에서 국내 공급량을 정할 수 있다.

특허법에는 전이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허를 강제로 실시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특허권자의 이익보다 대규모 사회적 피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협정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공개서한은 이런 법의 테두리 안의 조치로는 어렵다는 호소이다. 이 제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특허 보호가 무너지면 추가 백신 연구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을 펴지만, 그들의 논리가 일관성을 보이려면 미국이 지나치게 많이 확보한 백신을 해외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특허법이 인정하는 강제실시권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9·11 직후 미국이 독일 회사 바이엘에 강제실시권 설정을 압박해서 탄저병 대응 항생제를 충분히 싼 가격으로 대량 확보했던 사례도 참조하자. 문헌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이투데이



#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Next Mobility Life

# STARIA Lounge



## 미리 만나는 내일의 모빌리티



**bluehands**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집니다  
 회원혜택·블루핸즈 케어서비스/긴급출동/블루포인트/견인서비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문의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디젤 2.2 라운지 7인승 2WD 자동 8단(18") 빌트인캠 미장착: 복합 10.8km/ℓ(도심:9.8km/ℓ, 고속도로:12.2km/ℓ) | CO2 배출량 179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320kg(라운지 7인승) | 자동 8단 (4등급) ▶ 디젤 2.2 라운지 7인승 2WD 자동 8단(18") 빌트인캠 미장착: 복합 10.8km/ℓ(도심:9.8km/ℓ, 고속도로:12.2km/ℓ) | CO2 배출량 180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320kg(라운지 7인승) | 자동 8단 (4등급) ▶ 디젤 2.2 라운지 7인승 2WD 자동 8단(18") 빌트인캠 미장착: 복합 10.3km/ℓ(도심:9.2km/ℓ, 고속도로:12.0km/ℓ) | CO2 배출량 189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390kg(라운지 7인승) | 자동 8단 (4등급) ▶ 디젤 2.2 라운지 7인승 AWD 자동 8단(18") 빌트인캠 미장착: 복합 10.3km/ℓ(도심:9.2km/ℓ, 고속도로:12.0km/ℓ) | CO2 배출량 189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390kg(라운지 7인승) | 자동 8단 (4등급) ▶ 디젤 2.2 라운지 9인승 2WD 자동 8단(18") 빌트인캠 미장착: 복합 10.8km/ℓ(도심:9.8km/ℓ, 고속도로:12.2km/ℓ) | CO2 배출량 179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365kg(라운지 9인승) | 자동 8단 (4등급) ▶ 디젤 2.2 라운지 9인승 2WD 자동 8단(18") 빌트인캠 미장착: 복합 10.8km/ℓ(도심:9.8km/ℓ, 고속도로:12.2km/ℓ) | CO2 배출량 180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365kg(라운지 9인승) | 자동 8단 (4등급) ▶ 디젤 2.2 라운지 9인승 AWD 자동 8단(18") 빌트인캠 미장착: 복합 10.3km/ℓ(도심:9.2km/ℓ, 고속도로:12.0km/ℓ) | CO2 배출량 189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440kg(라운지 9인승) | 자동 8단 (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쁜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